

노동자 ·
서민층은
다음의 **중단**을
요구한다

민영화
연금식감계획
간접고용제도
노동조합
시간제 권리침해
교사제도

철도 노동자 투쟁

강제전출 반대 투쟁 평가와
투사들의 과제

▶ 8~9 면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노동자 희생으로
대기업 후원하기

▶ 6 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TPP는 한미FTA보다
더 큰 재앙"

▶ 2 면

환경오염과
중국 광둥성 소요

▶ 7 면

프랑스 지방선거

나치의 약진과
반파시즘 운동의 성장

▶ 10 면

누구의 말일까요?

“그리스가 [국채를 발행해] 돈을 더 빌리게 된 것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나? 우리의 모든 위기가 바로 부채 때문에 시작됐는데 말이다!”

그리스 노동자

“무노동 무임금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송파 세 모녀와 감옥에서 3백억 원 받는 재벌이 함께 사는 나라”

대기업 동기임원 연봉 공개에 네티즌들의 반응

“[유우성 씨 사건은] 간첩 조작 사건이 아니라 간첩 혐의 사건”

법무부 장관 황교안

명칭을 바꾸면 본질도 바뀌는 줄 아나?

“화성 연쇄살인과 같은 사건이 구미사에서 일어나면 지금부터 박정희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려야 하나요. 그럼 저는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개명하는 데 찬성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경북지사 예비후보 박승호의 구미시 개명 공약에 대한 한 시민의 반응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정의를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꾼 국립국어원의 변명

“담배와 폐암이 관련성이 없다면 왜 미국에서 담배회사는 그 많은 배상 비용을 지불한 것일까? 한국 사람의 폐와 미국인의 폐는 구조가 다르기라도 한 것인가?”

한 네티즌, 대법원이 ‘담배피해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자

“탈북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김○○, 4252’ 식의 이름표를 걸고 있었다. 5명 중 여성 4명은 모두 같은 자세로 무릎을 모으고 두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다. 모두 미동도 하지 않아 마치 정지화면을 보는 듯했다.”

합선센터를 방문한 <한겨레> 기자의 목격담. 이리나까 한국의 ‘관타모 수용소라고 하지

변호사: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나?”
국정원 직원 김 아무개: “예.”(방정석 웃음)
원세훈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이 질문들에 계속 “기억이 안 난다” 답하자

거리와 대학에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호 가판은 4월 28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14:30~15:3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나원 (오아시스빌딩 앞) 19:30~20:30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12:00~13:00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앞 12:00~13:00
격주 화요일 (다음호 가판은 4월 29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19:00~20:00 고려대 정경대 후문 16:30~17:30
격주 수요일 (다음호 가판은 4월 30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국민대 법학관 1층 식당 앞 12:30~13:3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 1층 입구 12:00~13:00 부산대(부산) 벡터광장 17:30~18:30
격주 목요일 (다음호 가판은 5월 1일)
울산 상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인하대 학생회관 앞 11:00~12:00 충남대 공대2호관 앞(쪽문) 17:30~18:30
격주 금요일 (다음호 가판은 5월 2일)
인천대 컨벤션센터 1층 12:30~13:30
격주 토요일 (다음호 가판은 5월 3일)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건물 앞 13:30~14:30
발행인 : 김원식 편집인 : 김민식 인쇄인 :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 : 서울다08179 (격주 2건)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 02-777-2792 팩스 : 02-6499-2791 제보 : 02-777-2791 E-Mail : ws@wspaper.org

우석균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TPP는 한미FTA보다 더 큰 재앙”

4월 25일 오바마가 한국에 온다. 오바마는 한국과 일본에 들러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려 할 듯하다. 박근혜 정부도 이참에 TPP 참여를 공식화할 듯하다. 우석균 보건 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사진)을 만나 TPP의 문제에 대해 들었다.

‘한미FTA 플러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12개 국가와의 FTA 협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TPP는 한미FTA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고 많이들 오해하는데, 달라요. TPP는 ‘한미FTA 플러스’예요.

TPP가 체결되면 한국은 한미FTA와 TPP 중에 더 나쁜 쪽의 기준을 따르게 돼요. 게다가 한국은 기존의 12개 협상 참가국이 결정한 협정문을 다 받아들여야 해요. 또 기존 협상국이 한국의 참여를 허가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려면] 한국은 기존 협상국들의 요구들을 다 들어줘야 하죠. 한미FTA에 ‘4대 선결조건’이 있었듯이 TPP에도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한미FTA를 ‘리오프닝’하는 문제가 있어요. 한미FTA 체결 당시 미국이 요구했는데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



정리 이현주

أت던 부분들을 다시 요구한다는 건데, [TPP에 참가하려면] 이걸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보다 유기농 인증에 대한 규제가 매우 완화돼 있는데[즉, 유전자 조작 식품(GMO)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 미국이 인증하면 한국에서도 그대로 인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민영화 촉진·규제 완화

TPP에 들어 있는 규정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국영기업에 대한 규정은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더욱 촉진시킬 거예요. 우체국이나 농협 등 한국에 남아 있는 여

러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요구할 겁니다.

둘째, ‘정부 규제 일관성’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걸 새로운 규제가 생길 때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영기업의 결정이나 활동을 정부가 상세하게 미리 알려야 하는 규정들이예요. 정부 규제 강화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본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죠. 사실상 규제 강화가 힘들어지는 거죠.

셋째, 새로운 수술, 치료, 진단 방법에 특허를 부여하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예요. 새로운 수술 방법에 특허료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비가 확 올라가겠죠. 지금까지 어떤 약을 3개월 먹었는데, 이 약을 6개월 먹었더니 좋다고 하면 이런 치료법 자체에도 특허를 낼 수 있어요.

넷째,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여전히 포함될 거예요. 최근 호주나 개발도상국 중 많은 나라들이 ISD를 투자협정에서 빼자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대중국 정치·군사 블록

TPP는 경제 블록이기도 하지만 정치적·군사적 [블록] 성격도 일부 띠고 있

습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RCEP(아세안+한중일+호주 등) 무역협정에 대항하는 협정이기도 하죠.

이번에 오바마는 경제적으로는 TPP, 정치적으로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정치적 압박을 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겁니다. 정부는 이미 TPP에 ‘관심 표명’을 했는데, 이번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하겠죠.

2008년 경제 위기 이전에도 [자유무역협정은] 자본의 수익률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더욱 절박한 자본들의 노력이라고 봐요. 이걸 막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한미FTA에 맞서 싸워 온 경험들을 잘 살려야 할 테고,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내에서 벌어지는 반(反) TPP 운동에도 연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4월 23일에 미일 간 농업 협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앞으로 TPP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일본의 반TPP 운동에 대한 국제 연대가 매우 중요하겠죠.

인터뷰·정리 이현주

※ TPP 반대 운동 일정 : 4·19 범국민대회 (자세한 정보는 아래 광고 참조)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

최근 법무부는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의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민수 씨는 1998년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는 가장이다.

법무부는 그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귀화를 불허했다. 이 벌금은 그가 운영하던 티베트 음식점이 재개발 사업으로 강제 철거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받은 것이다.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가 걸린 가계의 철거와, 세입자 대책을 뒤로 하고 이뤄지는 재개발에 대해 피해 당사자로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제 최소한의 저항은 이렇게 제 가족을 또다시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벌금형이 국적법상의 귀화 요건의 하나인 ‘품행 단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요건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전과 등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귀화 과정의 차별이 없도록 ‘품행 단정’ 등의 조항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

고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요건이다.

민수 씨는 분개해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벌금형을 왜 받게 된 것인지 고려하지 않고 품행 단정이라는 말을 쓰고 귀화를 불허시킨 것이다.”

법무부의 기준대로라면 수백억 원의 벌금을 ‘황제노역’으로 때워 구설수에 오른 대기업 회장들이야말로 ‘품행 단정’이 못함으로 말미암은 국적 박탈감일 것이다.

문제는 법무부의 귀화 거부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벌금형이 집행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이 돼 조만간 강제 추방될지도 모른다.

강제 추방

그런데 강제 추방을 당하면 향후 5년 동안 한국에 올 수 없고, 그 후로 15년 동안 귀화를 할 수 없게 된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거나 가족이 모두 네팔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를 뚫히 알고도 법무부는 그의 귀화를 거부했다. 추측컨대, 민수 씨가 한국에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억압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온 것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에 반대해 명동성당에서 농성 투쟁을 벌였던 경력을 패썹하게 여겼을 것이다.

사실, 국적법의 귀화 요건 자체가 터무니없고 차별적이다. 한국의 국적법은 ‘부계 혈통주의’를 고수하다 1997년에야 양성 평등 원칙에 위배돼 개정됐을 정도다. 그러나 지금도 인종차별적인 혈통주의를 고수해, 이주민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 없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국적법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불만을 살 만큼 이민자들에게 벽이 높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미래부 장관 후보였던 김종훈 같은 자에게는 없었던 국적을 불과 나흘 만에 회복시켜 줄 만큼 관대하지만, 민수 씨 같은 이주민은 한국에서 15년 이상을 살아오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웠어도 통과하기 어려운 만큼 가혹한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는 국적법의 귀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국적을 부여한다. 유명 스포츠 선수나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우수 인재’는 ‘국적’에 도움이 되지만 보통의 이주자나 그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국적 취득의 벽을 더욱 높여 왔다. 1998년 이전까지 외국인 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즉시 국적이

부여됐다. 그러나 결혼 이주민이 증가하자 한국 정부는 이른바 ‘위장결혼’을 문제 삼으며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귀화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최근에는 영주권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개악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영주권을 얻지 못하면 귀화를 신청조차 할 수 없고, 특히 난민과 이주노동자는 영주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귀화 신청 자체를 가로막는다.

이것은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강화되는 인종차별적 정책들인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출입국관리법 개악, 결혼 이주민 비자 발급 심사 강화 등 정책의 일부다.

법무부의 귀화 거부 이후 민수 씨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힘겨운 투쟁에 다시 나섰다. 이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제공하자.

임준형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불법체류’를 막는다며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7월 말부터 시행하는 제도. 한국에 있을 때도 임금이 체불되기 일쑤인 이주노동자들이 출국 뒤에 퇴직금을 받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함께 참가합시다!	민생파탄! 민주파괴! 박근혜 정권 심판! 4·19 범국민대회 4월 19일(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 주최 : 시국대회위원회	2014 세계 노동절 대회 5월 1일(일) 오후 2시 서울 시청광장(전국 동시 개최) 주최 : 민주노총
정부의 영터리 기초연금안에 분노하는 촛불문화제 4월 15일(화) 오후 7시 보신각 주최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폐! 100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는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4월 27일(일) 오후 2시 보신각 집회 이후→청계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최 : 경기이주공동대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탄압 분쇄! 통상임금 노사지도침 폐기! 임·단투 승리! 전국노동자대회 5월 1일(목) 오후 1시 서울 여의도문화마당 주최 : 한국노총

서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집(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용암동), 역사전문서점 물음(반동사거리)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노동자 연대 안드로이드 앱 새 온라인 기사와 신문이 나오면 알려 드립니다. 최신 기사를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goo.gl/evF3xg

부대사업 확대, 원격 의료 허용,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더 강화할 때다

장호중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24일로 예정됐던 2차 의사 파업이 무산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속전속결로 추진하려 하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의사협회 지도부와 합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의사협회 지도부와 합의한 ‘6개월 시범 사업 실시’는 단지 파업을 무산시키기 위한 시늉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애당초 합의문에 이 점이 모호하게 돼 있었지만 의사협회 지도부는 파업을 취소했다.

따라서 의사협회의 합의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는 모든 이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편승하고 말았다”는 보건의료노조 등의 비판은 타당하다.

박근혜는 곧이어 3월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료 민영화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4월 3일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고, 4월 4일에는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안에 입법 예고하겠다고 선포했다. 4월 9일에는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도 애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찾지 않고도 진료를 받고 간단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매달 병원에 가야 하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환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혹은 산간벽지 등의 주민들을 고려하면 이런 필요는 쉽게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게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는 의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빌미일 뿐이다.

원격의료는 의료진을 직접 만나 진찰을 받고 치료받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 화면이나 몇몇 전자장비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위험을 낳는다. 원격으로 전송되는 단편적인 정보들은 대면 진료를 대체하기 어렵고, 원격 ‘치료’는 지금 수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득보다 실이 많다. 정부가 의



4월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 건강·철도 지킴이 발대식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박근혜 정부는 4~6월에 중요한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강행하려 한다.

회해 3년 동안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도 원격의료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 의료 기능을 대폭 확대해 왕진이나 야간 진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법인세 감면을 철폐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조금만 더 거두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IT기기와 의료기기 등을 집집마다 구입하도록 해 이런 필요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는 노인을 부양하고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겨, 삼성처럼 의료기기와 건강관리 서비스업에 뛰어난 대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부대사업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도도 의료 민영화의 일환이다. 현행법으로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은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에만 매달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대부분의 병원이 편법·불법으로 돈벌이에 매달린다. 그중 하나가 부대사업인데, 병원은 병원 내 주차장, 장례식장, 구내 매점, 식당 등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있는 규제조차 무력화하려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병원이 자회사를 만들어 이 자회사가 부대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이 ‘영리’ 자회사는 사실상 지주회사 구실을 해, 결국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로펌에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도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결과를 통지받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애써 무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는 이번엔 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발표하며 반발을 의식해,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거론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은 제외한다고 말했

지만, 정작 공식 발표 자료에는 그 사실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의료기기, 병원] 임대업과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이번엔 허용하겠다고 한 부대사업만으로도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 건 강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설 수 있다.

무엇보다 시행규칙은 국회나 심지어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 없이 법제처 등의 심사만 거치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입법 예고에서 시행규칙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시한이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단축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4월 내에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구실

한편,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통합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점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이 4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부대사업 확대 조치도 이와 연동돼 미뤄질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안철수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전혀 믿음직한 아군이 아니다.

철도 민영화,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진주의료원 폐원 등 지난해 내내 벌어진 박근혜의 공격에 맞서 민주당은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했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개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은 벌써부터 물러설 준비만 하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무기력한 것은 단지 의석 수가 적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인정했듯이 자신들도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관광활성화” 등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들의 상당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추진하던 것들이다. 지금의 영리 ‘자회사’도 노무현 정부의 “병원경영지원서비스”의 변형이라 할 만하다.

추진 명분도 당시나 지금이나 경제성장, 의료 산업 활성화 등 빼다 박았다. 안철수는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면 서로 “더 많은 보장을 원한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며 복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지우려 한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자본가들 일부에게 기반을 둔 정당이라는 엄연한 현실에서 비롯하는 한계다.

반면, 노무현 정부 이래로 의료 민영화를 막고 지난해 내내 박근혜의 공격에 맞서 싸운 힘은 모두 노동계급에게서 나왔다. 노동자 투쟁은 박근혜의 정책에 불만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는 투쟁의 구심이 돼 왔다. 6월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까닭이다.

박근혜가 속도를 내는 만큼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의료 민영화 반대 세력도 지금부터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포럼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듣는 의료 민영화의 진실

연사 : 백소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본부장 / 아주대병원지부장

일시 : 4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회의실

수원역 8번 출구 3백미터 대산동주민센터 옆 골든프라자 5층

참가비 : 2,000원

문의 : 010-7664-3536 (문자도 환영)

강릉·원주 의료원 매각·이전 계획 폐기하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강원도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제출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에서 강릉의료원을 민영화하고 원주의료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공청회를 연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보고서가 “오로지 공공병원을 해체하고 매각하기 위한 짜맞추기 연구 … 강원도 지방의료원 파괴 보고서”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무엇보다 연구 내용과 결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보고서는 “원주권역 내 2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원주의료원이 유일”하고 “권역 내 의료전달체계상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레 놓고는 느닷없이 “민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2월 5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지방의료원 매각은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다.

내린다.

2월에 발표한 보고서는 경영 악화가 “간호직, 의료기사직, 사무직 인건비 비율이 높음에 장기 근속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노동자들의 근속 연수가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만큼 숙련도가 높아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흥원은 ‘의료의 질’이 아니라 경영 실적을 갖대로 공공병원의 가치를 평가하려 한다.

이처럼 엉성한 연구 결과를 두고 비판

이 일차 최종 보고서는 결론을 살짝 바꿔, 원주의료원을 이전하거나 재배치하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앞뒤가 안 맞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2003년부터 원주 지역의 인구가 매년 5천 명씩 늘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공공병원을 이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강릉의료원에 대해서도 “지역 내 경쟁과잉”이라면서도 대학에 ‘매각’해 “병상 증설 운영”을 하라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릉의료원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3백13억 원을 투자해 증축과 리모델링을 마쳤고, 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완공해 5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를 내다 팔라고 한 것이다.

진흥원은 강원도에 마땅한 의료 시설이 부족해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을 두고는 ‘의료 이용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민영화로 이를 해결하자고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가 약화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더 많이 ‘유출’되거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고,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높일 뿐이다.

이토록 모순 투성이인 보고서가 버젓이 제출된 이유는 이 연구 자체가 지방의료원 민영화를 목표로 기획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강원도의회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매각[을 위해] 강원도에 연구용역을 진행하도록 압박했고 5년간 매년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예산안마저 모두 삭감했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연구용역 업체를 방문해 … 부당한 압박”을 넣은 듯하다.(전국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영터리 처방전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의 재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사용하겠다고 재개원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뻔하게도,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문 닫는 대신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서민 무상의료 대책”도 순전히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지난해 11월 ‘서민 무상의료 대책’을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정책’으로 슬그머니 바꿔치기한 것이다.

이런 홍준표 재선 출마 선언에 진주의료원 노동자, 환자, 유가족들은 분노했다.

보건의료노조 안외택 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홍준표 지사의 불통 행정으로 환자 40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2백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홍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벌써 4백 일 넘게 재개원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2백 일이 넘도록 경남도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악랄하게도 홍준표는 지난해 겨울 내내 천막 하나도 치지 못하게 했다.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를 규탄했다. “환자를 내쫓으려고 악몽 공급도 중단하고,

의사도 해고했다. 매일같이 도청 공무원을 시켜 전화며 문자로 퇴원을 종용했다.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병원을 옮겼다. 결국 43시간 만에 사망했다. 고(故) 왕일순 할머니의 이야기다. 왕일순 할머니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주의료원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빼앗겼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야당 예비후보들과 진주시 시장·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고 있다. 3월 17일 진주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재개원 여론이 절반이 넘었다. 이는 1년 넘도록 이어진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덕분이다.

한편, 경남도지사 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박완수는 홍준표와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진주의료원 폐원을 문제 삼으면서도, “새로 설립할 경남행복의료원은 기존 노동조합과 무관하고 조합원의 고용승계도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이 자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면담 요청도 차갑게 뿌리쳤다.

이런 행태를 보건대, 박완수가 당선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더라도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할 것이고, 이는 공공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난해 폐원에 맞선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대중적 바람을 대변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일부다.

장호중



진주의료원 투쟁은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의 일부다.

현대차 전주 공장 투쟁

버스부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로 사측의 합의 위반을 바로잡다

일주일간 버스 생산을 마비시킨 현대차 전주 공장 버스부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 투쟁을 중단하고 4월 7일 현장에 복귀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만 한시적으로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늘리기로 한 합의를 뒤집고 이를 계속 유지하려 한 사측에 항의해 3월 31일부터 작업을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본관 항의 농성을 하고, 라인을 재가동하려는 사측에 맞서 전투를 벌였다.

이 같은 저항은 올해 초부터 기존 노사 합의를 무시하며 노동자들을 조이고 징계를 남발하던 사측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 버스부에서 작업 거부가 벌어진 지 며칠 뒤부터는, 잔업·특근 거부 투쟁을 하고 있던 트럭부·엔진부 등에서도 투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사측은 기존 합의서를 준수해 시간당 생산대수를 지난해 10월 이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며 한 발 물러서야만 했다. 공세를 강화하던 사측이 노동자들의 반격에 놀라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주일간의 작업 거부를 이유로 가해진 징계(불법 파업) 규정에 따른 임금 삭감, 41명 고소고발, 1백40억 원 손해배상 협박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버스부의 한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UPH 합의서를 원상 회복시킨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고소고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투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버스부 투쟁에 대한 사측의 보복 탄압이 다시 분노를 자극할 수도 있다.

사측은 생산성을 높이려고 지난 2월 버스 공장에 신형 설비를 설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를 하지 않아 반발이 일어났다. 사측은 항의 행동에 앞장선 버스부 대의원을 해고했고, 해고 철회를 요구하던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침탈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은 3월 초부터 전주 공장 전체 노동자들이 특근 거부 투쟁에 나선 계기가 됐다.

그런데도 사측은 여전히 해고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불씨

버스부를 비롯해 전체 전주 공장 노동자들은 사측의 현장 통제와 합의 위반 등에 맞서 잔업·특근 거부를 지속하고 있다.

전주공장위원회가 지난 1일 결정한 요구안들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보여 준다. ‘기초질서 지키기’ 압박 중단, 각종 합의서와 ‘작업재개 표준서’ 준수, 해고자 징계 철회, 고소고발·손배가압류 취하, 책임자 해임과 공장장 공개 사과 등.

실제로 지난 2월부터 전주 공장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져 왔다. 관리자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노사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을 재개한다는 ‘작업재개 표준서’까지 어겨 가며 라인을 무작정 돌리려 했다.

또,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통제하려는 ‘기초질서 지키기’ 강요에도 불만을 터뜨려 왔다.



작업 거부로 멈춰선 생산 라인.

사측은 이처럼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버스부 작업 거부가 시작되자 투쟁이 확산될까 봐 노심초사했을 것이다. 그래서 투쟁의 확산을 차단하려고 버스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했다.

한편 이경훈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전주 공장 투쟁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보내지 않았다. 이경훈 집행부는 최근에도 ‘전주위원회가 구성한 쟁의대책위는 노조 규약과 규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의 투사들이 전주 공장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집회 개최 등을 요구한 것은 아주 올바른 일이었다.

전주 공장의 투쟁은 아직 불씨가 남아 있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기아차의 다른 공장 활동가들은 전주 공장 투쟁에 지지·연대를 건설하면서, 자신의 공장에서 벌어지는 현장 통제 시도에도 맞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허수영



“삼성을 바꾼 삶을 바꾸자” 3월 28일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폐업철회! 단협쟁취! 민주노조사수! 삼성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고장난 삼성

이렇게 생각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투쟁

폐업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3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 아산, 이천 센터가 폐업했다. 해운대센터에 이어 세 번째다.

아산과 이천센터 사장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경영 악화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머 원정과의 재계약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독점하는 센터가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폐업으로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났고, 시민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작 ‘고객 만족’과 ‘또 하나의 가족’을 부르짖던 삼성은 이런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폐업의 목적이 노동자 탄압에 있기 때문이다. 저들은 각 지역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센터들을 하나씩 폐업해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본보기기를 보이려 한다.

이런 악랄한 탄압이 바로 삼성이 75년간 무노조 경영을 유지한 비결이었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일은 노동자들이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폐업 이후에 6개 센터 노동자들이 새로 노조에 가입했다. 노동자들이 그간 쌓아 온 분노와 이번에는 반드시 투쟁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투지가 삼성의 탄압에도 노동자들을 결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폐업 센터의 노동자들도 폐업 철회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굳건하게 싸우고 있다. 노동자들은 매일 집회를 열고, 농



폐업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성도 하고, 지역에서 서명을 받으며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해운대에서는 폐업 철회 서명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고, 아산에서는 지역 대책위가 만들어졌다.

노조는 사측이 폐업을 철회하지 않고, 건당수수료 폐지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전면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다른 센터의 노동자들도 폐업 센터의 노동자들에게 투쟁기금과 물품을 보내며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폐업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A/S가 제품 판매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삼성도 무한정 센터들을 폐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폐업이 기업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저들은 언제고 또 폐업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이미 삼성은 일부 센터들과 3개월짜리 계약을 맺어 그럴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점거

그런 점에서 또다시 사측이 폐업 카드로 노동자들을 위협할 때 이에 맞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세계적인 노동자 운동의 경험

은 작업장 점거가 사측의 폐업에 맞서 싸우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거듭 입증해 왔다.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점거하면 기계, 설비, 자재, 전산 데이터 등을 확보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회유·협박하거나 이간질 하기도 어렵다.

반면, 노동자들은 24시간 함께 모여 토론하고, 투쟁 계획을 결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더 민주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 또한 작업장 점거는 노숙농성보다 더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연대를 확대하고 사회 쟁점화하는 데에도 더 유리하다. 노동자들이 폐업에 항의하며 작업장을 점거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끈다. 따라서 다른 노동자들과 단체들의 연대를 조직하기도 더 쉽다. 언론도 더 주목하게 된다.

기업주가 작업장을 매각하거나 설비를 빼내려고 하면 노동자들을 몰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점점 더 폭력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기 때문에 정부와 사용자는 수세적인 처지에 몰리게 된다.

그런데 점거 전술은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통제해 직접 운영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폐업의 대안으로 노동자들이 기업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종종 제안된다.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폐업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센터를 인수하자는 주장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현하기도 어렵거나 설사 노동자나 시민들이 기업을 인수해 운영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남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주의 기업의 생리 때문에 곧 모순에 빠진다. 즉,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착취해야만 살아남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작업장을 폐쇄해야 하거나, 임금 삭감·해고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결국 ‘타락’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에서 고립된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작업장’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작업장 점거는 정부와 사용자의 공격과 우파 언론의 비난 등을 수반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전투성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폐업이 예상될 때 점거가 왜 유용한 전술인지를 충분히 토론하고 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많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점거가 폐업에 맞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 자리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두고 토론하고 고민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노동자 희생으로 대기업 후원하기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서 ‘끝장 토론’이라는 쇼까지 벌이며 시행한 규제 완화 열풍이 한 달도 채 안 돼 시들해지고 있다. 정부의 압력으로 각 지자체들이 앞다퉀 ‘규제 완화 추진단’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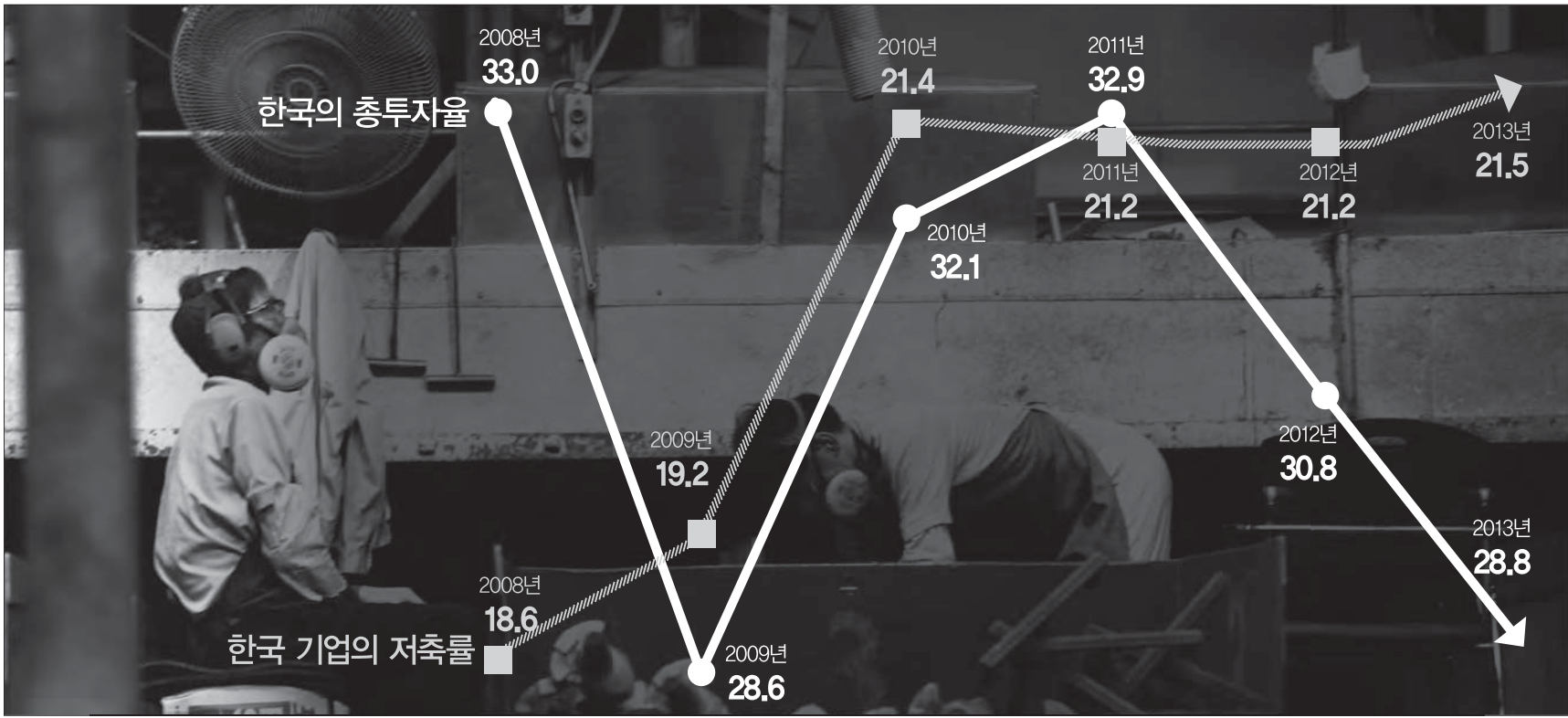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상징인 ‘푸드 트럭 허용’은 벌써부터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박근혜가 언급한 지 며칠 만에 푸드 트럭 개조는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를 유원지 등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푸드 트럭을 합법화하면 기존 노점상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형태만 바뀐 노점상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소상공인이나 편의점 등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유원지에는 이미 상권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푸드 트럭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까지 공격받자 반발이 커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 규제 2천1백34건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여성 고용 모범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 농민 우대 등과 같은 지원 조례를 폐지 대상에 포함하고, 대형마트 입점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도 역시 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공정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야 했다.

게다가 수도권 지역의 공장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지방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지방 이전을 고려하던 업체들이 정부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면 망설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처럼 지배자들 사이의 분열과 중소기업 등의 반발 때문에 떠들썩하게 제안된 규제 완화 정책의 상당수가 쉽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본질적으로 대기업을 후원해 투자를 늘리려는 정책이다. 기업 투자가 줄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기업 투자를 끌어내려 인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 민영화와 원격 의료 허용,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수산업단지 공장 증설 허용 등처럼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은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도 박근혜 정부는 2~3년 유예기간을 두고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낙수 이론?

이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본질적으로 대기업을 후원해 투자를 늘리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한국의 총투자율은 2010년 32.1퍼센트에서 2013년 28.8퍼센트로 급감했다. 특히, 2012년 30.8퍼센트보다 2.0퍼센트포인트나 떨어졌다.(그림 참조)

기업 투자가 줄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

질 것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기업 투자를 끌어내려 인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에 투자율이 늘어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투자 확대는 규제 완화보다 기업의 수익성에 의해 좌우된다. 2010년은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해였다. 최근처럼 세계경제가 다시 불확실해진 상황에서는 몇 가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의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올려 주려고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노동자들과 평범한 대중의 삶을 위협하고, 이는 오히려 소비를 줄여 기업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규제 완화로 기업의 투자가 늘면 그 혜택이 노동자들에게까지 돌아갈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낙수 이론’은 2008년에 시

작된 세계경제 위기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도 IMF를 불러들인 1997~98년 공황 이후 적극 추진된 규제 완화 정책들은 신용카드·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주택은행 파산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경제에 타격을 주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대중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사회 최상층이 자기 배만 불리고 경제 위기의 재발을 막지 못하는 것을 봤다. 반면 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경험을 했다. 이런 경험이 철도·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그들이 지지하게 만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민영화, 통상임금 공격, 노동시간 단축 반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발전시킬 때 우리의 삶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강동훈

시간제 교사제 도입에 맞서 교육대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다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현직 전일제 교사를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를 3천5백 명 뽑겠다고 하고, 내년 신규 채용 정규 교사 몫 중 3백 명을 시간제 교사 6백 명으로 대체하겠다고 시간제 교사 신규채용을 강행하려 한다.

교대생들과 교사들은 정부의 시간제 교사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교육대학교 10곳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로 구성된 전국 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지난달 22일부터 동맹 휴업 투표를 진행했다.

학교 12곳에서 찬성률이 80퍼센트가 넘어, 4월 5일 교대련 전국학생대표자회의에서 동맹휴업이 최종 가결됐다.

4·11 동맹휴업에 교육대 학생 1만 2천여 명이 참가했고, 당일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는 2천5백여 명이 참가해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동맹휴업 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눈 감고 귀 막은 교육부는 예비 교사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시간제 교사제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며 교육부의 ‘묻지 마’ 시행령 개정 강행을 비판했다.

교육부는 동맹휴업 직전에 고위 관계자를 학교에 보내 동맹휴업을 막으려고



4월 11일 서울 서대문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대 학생들의 동맹휴업 집회.

압력을 행사했다. 교육부차관이 직접 총장들에게 전화해 “학생 관리를 잘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교육희망>) 이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교육대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했다.

시간제 교사제의 실제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 및 지위”를 보장받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수요가 없는 경우 전일제 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고, 일부 소수 교과목 교사들은 시작부터 평생 시간제 교사로 일하는 조건으로 임용에 응해야 한다. 정년을 보장한다는 정부 말을 믿고 응시했다 대량

해고당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시간제 교사의 미래를 보여 준다. 따라서 정규 교사 임용을 확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의 신분 불안 해소” 운운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말은 뻔뻔한 위선이며 또 하나의 비정규직 양산일 뿐이다.

교사들은 수업뿐 아니라 담임 업무와 생활 지도 등 각종 업무를 한다. 그러나 시간제 교사는 수업만 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학생들과 유기적인 교감을 형성하기 매우 어렵고 업무가 단절돼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한편, 교원 수는 가뜰이나 부족한데도 올해 3월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들이 단 한 명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교원 신규 임용은 일정 규모의 교원이 퇴직해야 신규 발령 규모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했고,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예산이 늘어나자 퇴직 신청을 반려하면서 무더기 미발령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제 교사제 도입은 자연히 정규 교사 채용 몫을 줄여, 예비 교사들이 정규 교사가 될 확률은 그만큼 더 줄게 된다. 결국 시간제 교사 도입은 예비 교사인 교육대 학생들의 취업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것이다.

정부는 시간제 교사제를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저질’ 일자리 양산, 교육의 질 하락, 교사들의 노동조건 악화다.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시간제 교사가 아니라 정규 교사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2년 중등 기준 32.5명으로 2010년 OECD 평균인 23.4명보다 많다.

박근혜는 대선 때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말대로라면 2017년까지 추가 충원해야 할 교사 수

는 1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정부는 2017년이 아니라 2020년에, OECD 상위 수준이 아니라 OECD 평균 수준으로 하겠다고 후퇴하고 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020년까지 교사 7만 명을 더 임용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시간제 교사제를 도입해 고용률 수치를 장난치려 한다.

잔파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업 당일 있는 교대련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1년간 시간제 교사를 시범 운용한 뒤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은 채, 시간제 교사제를 시범 운용하겠다는 것은 알팍한 꼼수일 뿐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하려는 노동유연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선량한 학생들에게 동맹휴업 참여를 강요”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다시금 으름장을 놓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발을 피해 보려는 교육부의 잔파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교조는 예비 교사들이 동맹휴업으로 맞선 시간제 교사제 도입 반대 투쟁을 받아안아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서정은

중국 광둥성 소요

고도성장이 낳은 환경오염에 불만이 폭발하다

김영익

3월 30일 중국 광둥성 마오밍시에서 파라자일렌(PX) 공장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소요가 일어났다. 그 지역 지방정부가 국유기업 시노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존의 석유화학 공장에 연간 생산량 60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려 하자, 환경오염을 우려한 현지 주민이 강력하게 항의에 나섰던 것이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적어도 수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파라자일렌 공장 건설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처음에 시위대의 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이윽고 중무장한 경찰의 잔인한 진압으로 시위는 순식간에 격렬한 소요 사태로 비화했다. 일부 중화권 언론들은 소요가 격화하자 당국이 탱크와 무장 차량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주민들은 진압 과정에서 15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돌맹이를 던지고 경찰 차량을 불지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무장 경찰들의 모습과 도로 한복판에 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위 참가자의 사진들이 올라왔다. 한 목격자는 웨이보에서 마오밍시 전체가 전쟁터와 같으며 연대를 호소했다.

중국 당국은 소요 사태가 터지자마자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나섰다. 웨이보나 중국 국내 포털 사이트에 마오밍 관련 소식과 사진이 올라오면, 얼마 안 가 바로 삭제됐다.

소요 사태가 터진 직후, 당국은 “소수의 불법분자들이 군중을 선동해 과격 시위를 주도했다”며 시위대에 비난을 퍼부었다. 나중에 당국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망자는 없다고 우겼다.

저항의 확산

중국 당국은 저항의 확산을 막으려 폐쇄했지만, 이 사태가 전국적 화제가 되는 것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주 내내 마오밍에서 시위가 계속됐다.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일부 참가자들이 사망자와 부상자를 위한 정의

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었다고 했다. 일부 학생들은 수업 거부, 일부 노동자들은 연대 파업에 나섰다.

저항은 광둥성의 다른 도시로 확산됐다.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에서 연대 시위가 일어났고, 이는 곧 인근 도시 선전으로도 번졌다. 중국의 주요 제조업 밀집지역이자 노동자 투쟁이 가장 활발한 광둥성에서 말이다.

마오밍 주민이 파라자일렌 공장 건설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파라자일렌은 플라스틱병, 필름, 폴리에스테르 의류 등을 만드는 데 광범하게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다. 그런데 파라자일렌이 흡입되거나 몸 속으로 들어가면 인체에 해롭다. 파라자일렌은 발암물질인데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인화성이 높아, 화재가 나면 공장 주변의 주민이 위험해질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파라자일렌의 국내 생산을 늘리려 애써 왔다. 국내 수요가 빠르게 늘어, 파라자일렌의 수입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지방정부들도 앞다투어 기업들과 손잡고 파라자일렌 공장을 건설하려 했다.

파라자일렌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과 노동자들은 이 공장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믿지 않는다. 이런 불신에는 근거가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장저우에서 파라자일렌 공장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 관영 〈런민리바오〉(인민일보)는 파라자일렌이 “커피만큼이나 무해하다”고 보도했다!

다렌 시위

파라자일렌 공장을 비롯한 위험한 화학공장 반대 시위는 2000년대 중국에서 벌어진 집단적 저항의 중요한 일부였다. 2007년 중국 푸젠성 사먼시에서 공장 건설 반대 시위가 강력하게 일어나, 결국 지역 당국이 다른 지역으로 공장 건설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2012년 저장성 닝보에서도 주민 시위가 연일 계속되자 예정된 공장 건설 계획이 좌절됐고, 지난해 5월 윈난성 쿤밍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승리해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킨 바 있다.

특히, 2011년 8월 랴오닝성 다렌에서



환경오염에 맞선 투쟁은 오늘날 중국에서 벌어지는 저항 운동의 중요한 일부다. 경찰 폭력에 분노한 마오밍 주민들이 경찰 초소를 불태웠다.

벌어진 파라자일렌 공장 반대 시위는 매우 대단한 사건이었다. 다렌 주거지 근처의 파라자일렌 공장에서 강으로 배출된 유독 물질이 태풍과 함께 주거 지역을 덮칠 뻔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위가 시작됐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환경오염 반대 시위이자 1989년 톈안먼 항쟁 이후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위였을 것이다.

아마도 공장 반대 시위에 나선 마오밍 주민은 이런 사례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마오밍 소요가 커지면서 이웃 도시로 번지고 동조 파업까지 일어나자, 중앙 정부와 마오밍 당국은 여론을 수렴해 공장 건설을 진행하겠다고 일단 불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의 지배 관료들은 자칫 이 사태가 커지면 다른 사회적 불만과 결합돼,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번질 것을 우려했던 듯하다.

그러나 관료가 공장 건설 계획을 쉽사리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파라자일렌 공장의 확장과 개조에 관한 인허가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줬. 관련 인허가 절차가 더 쉽게 이

뤄지도록 해 준 바 있다. 그리고 마오밍 당국은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장 건설 찬성 서명을 받고 있고, 밤에 대학 기숙사를 조사하고 대학생들의 외출을 금하기도 했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환경오염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베이징의 ‘살인 스모그’는 중국 환경 문제의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환경 파괴와 오염을 둘러싼 불

만과 저항은 상당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 2006년 중국 환경부의 한 고위 관료가 2005년에 환경 파괴에 항의하는 시위가 매주 1천 건 가량 발생했다고 밝혀, 나라가 발칵 뒤집힌 바 있다. 앞서 봤듯이, 이런 시위 중 일부는 거의 봉기 수준이다. 따라서 이런 저항이 다른 사회적 불만이나 노동자 투쟁과 결합되면, 중국 전체를 뒤흔드는 사태로도 발전할지 모른다.

한국에도 파라자일렌 문제가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파라자일렌 생산국이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5년까지 중국의 파라자일렌 수요가 1천6백만 톤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민일보〉, 3월 31일)

그래서 한국의 석유화학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파라자일렌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고 있다. 그동안 파라자일렌 사업이 이 기업들한테 상당한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같은 대기업들이 외국 자본과 합작해 파라자일렌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며 이 기업들을 지원해 줬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파라자일렌 공장의 유해성 문제가 일부 지역의 환경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서구에 파라자일렌 공장을 증설하려 한다. 그러나 공장 바로 맞은편에 주택가와 초등학교가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공장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일본 4·8 대집회

아베의 군사 대국화 추진에 많은 일본인들이 반대한다

4월 8일, ‘해석 변경으로 헌법9조를 부수지 말라! 4·8 대집회’가 도쿄 도심에서 열렸다.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노동자·학생·시민 등 5천 명이 모였고, 아주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1백28곳이 함께 연 이 집회는 아베 정권이 강행 추진하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공동 행동이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과 특별비밀보호법 제정을 강행하고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확정해, 다한층 군사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사실상 전면 자유화해, 동아시아에서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일본이 더 큰 군사적 구실을 해주기를 바라는 미국은 이런 아베의 행보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강한 나라’로 되돌려 놓겠다는 아베 정권의 제국주의적 야욕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일본인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아베와 자민당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되는 ‘필요 최소한의 사태’에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한정용인론’을 주장하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아베의 ‘한정용인론’은 속임수일 뿐이고, “실사한정적이더라도 이것은 헌법해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를 허용하게 되면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전쟁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아베를 규탄했다.



일본의 또 다른 모습. 일본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한다.

또, “연이어 강행되는 평화주의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아베 정권의 독단적인 추진 방식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운동이 집단적 자

위권 문제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단에 오른 한 청년은 지금 일본 청년들이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 힘든 이유는 그들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비세가 인상되는 등 아베 정권

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속에서 괴로워하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만이 아니라 아베 정권이 추진하려는 모든 것에 반대해야 한다.” 이 청년은 큰 박수를 받았다.

꾸준히 일본 군사 대국화에 반대하는 행동을 촉구해 온 작가 오에 겐자부로의 연설도 큰 박수를 받았다. “우리가 지난 67년 동안 지켜온 ‘전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시대 정신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위 행동’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렇게 외치며 4월 22일 2차 행동의 날을 결의했다. “우리의 주장은 압도적 다수다.” “민중의 힘을 모아 전국에서 아베 정권을 포위하는 행동에 나서자.”

최미선 일본어 전문통역가



3월 29일 '철도노동자 총파업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가두시위를 하는 노동자들

계속되는 강제전출 철회 투쟁, 그리고 투사들의 과제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강행에 현장조합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베테랑 선배·동료들이 하루아침에 타지에서 '초짜'로 강등되는 기가 막힌 일에 분개했다. 전출 대상 노동자들도 "청춘을 바쳐 일해 온 대가가 이것이야"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부산 전기 조합원 조상만 동지의 죽음은 강제전출이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임을 보여줬다.

노동자들은 이번엔 강제전출이 시작되면 사측은 언제라도 인사를 앞세워 강제전출을 일삼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의 진정한 목적은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올해 화물 운송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로 떼어내는 등 철도 분할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라는 사측으로서의 현장 통제력 약화가 사할적이다.

이 때문에 현장조합원들은 곳곳에서 전면 혹은 부분 작업 거부, 휴일근무 거부, 농성, 단식 등으로 저항했다.

물론 사측은 현장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애초 목표인 5~10퍼센트(한~2천여명) 규모의 강제전출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특히 파업을 결의하며 강력히 반발했던 기관사와 차량 노동자들의 강제전출을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했다. 사측도 온전히 목표를 성취하지는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강제전출은 철도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또, 7월에 기관사와 차량 노동자들의 대규모 강제전출이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강제전출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방본부장과 서울지역 지부장

수십 명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서울 차량지부 조합원들이 수색역 구내 45미터 철탑에 올랐다. 서울기관차지부 전출 대상자 3명도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저항은 서울뿐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투쟁은 아직 진행형이다.

돌아보기

그러나 적지 않은 현장조합원들은 '더 강력한 투쟁으로 이번 강제전출의 물고트기를 막을 수 있었다'며 뼈아픈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현장조합원들의 반발과 투지는 강력했고 파업까지 일어날 뻔했다. 그러나 기층의 파업 결의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정적인 국면에서 투쟁을 전진시키는 데서 한계에 직면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3월 하순 기관사와 차량 직종의 파업 결의 이후 빠르게 투쟁 열기가 높아졌다. 노동자 수백 명이 삭발로 투쟁을 결의했고, 이 열기는 5천여 명이 모인 3월 29일, 서울역 집회 때 절정에 달했다. 전기·열차 등 다른 직종으로도 투쟁이 확대되는 상황이였다.

이런 분위기에 밀려 사측은 '인력분류령 해소' 차원의 전출과 역·시설·전기 분야의 강제전출을 즉시 시행하되, 가장 투쟁적인 기관사·차량 직종의 대규모 강제전출은 7월로 연기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는 책략이 눈에 뻔히 보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노사협상의 노조 측 대표는 이 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노사

의 '협의 결과'에는 파업을 철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 협의의 결과가 알려지자 현장조합원들 사이에 분노가 들끓었다. 결국 이 부적절한 '협의 결과'는 현장조합원들의 반발로 파기됐다. 현장 지부장들로 구성된 서울지방본부 정대의위원회는 신속하게 회의를 열어 '협의 결과' 파기를 선언했고, 지방본부장들로 구성된 의장단회의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현장조합원들과 투사들이 강행한 중요한 사태 변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운전지부장들과 전국 차량지부장들은 파업 돌입을 재확인하고 실행 의지를 천명해야 했다. 그런데 이들은 최종 결정권을 다시금 위원장과, 이 열기는 5천여 명이 모인 3월 29일, 서울역 집회 때 절정에 달했다. 전기·열차 등 다른 직종으로도 투쟁이 확대되는 상황이였다.

결국 철도공사는 4월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강제전출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자 현장조합원들은 7월 7일로 예정된 사측의 명단 발표를 막아야 한다며 즉시 투쟁에 돌입했다.

5일 서울차량 조합원들이 전면 작업 거부에 돌입했고, 오후 들어 병점차량지부가 부분 작업 거부에 들어갔다. 수도권 차량지부들도 하루 이틀 내로 작업 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기관차지부와 용산기관차지부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했고, 조합원들이 단식까지 벌이며 위원장에게 '지명 파업' 승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청량리와 부곡기관차지부도 파업 동참을 결의했다. 그러나 중앙 지도부는 이런 현장조합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끝내 회피했다. 서울차량지부는 지도부의 '지명 파업' 승인 약속을 받고 작업 거부를 풀었지만, 위원장은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제 상황은 더욱 분명해졌다. 중앙 지도부는 강제전출에 맞서 파업을 강행할 의사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조직력을 복원해야 한다며 당장 파업에 들어가기 어렵다거나, 힘을 비축해 화물 분리 때 파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측이 공세를 퍼붓는데도 투쟁하지 않는다면 노조 조직력을 보존하는 것은 더 힘들어진다. 싸움은 혼자 하

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공격에 나설 때 방어하지 않고 물러서면, 힘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더구나 지금 벌어지는 공세를 막아내지 않고서는 하반기에 벌어질 물류 분리(민영화)에 맞서 강력하게 싸우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가야 한다.

서울차량지부의 작업 거부에 이어 기관차 지부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다른 지부들에게 파업 동참을 적극 설득하며 투쟁을 확대해 나가야 했다.

이를 위해 투사들은 지부와 직종을 넘어 투쟁위원회를 건설해 파업을 이끌어야 했다.

정면 충돌을 회피하려는 지도부를 거슬러 투쟁을 밀고 나가려면 매우 단호해야 했다.

이렇게 단호하게 파업에 돌입했다면 투쟁을 확대할 기회를 잡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파업을 성사시키고 강제전출을 막지 못했다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교섭을 적용할 기회는 남아 있다.

일부 투사들은 고공 농성이나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투쟁을 더 광범한 현장조합원들의 투쟁으로 확대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최근 일부 차량지부들이 부분 작업 거부를 다시 시작했다. 강제전출로 인력이 빠져나간 자리를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매우도록 사측이 임의로 작업을 재편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울기관차지부는 강제전출 원상회복을 위해 다시 파업을 결의하고자 다른 기관차지부들에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측은 강제전출 강행의 기세를 몰아 현장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화물열차 1인승무 시범운행도 강행할 예정이다.

지금, 아직 견제할 현장조합원들의 힘을 동원하는 집단적 투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다가올 7월 강제전출을 중단시킬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정원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우려 하지 않을 때 현장의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조합 상근 간부들은 노동조합이 직면한 어려움으로 조합원들의 낮은 의식 수준(특히 수동성 문제)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쟁이 벌어지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그때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흔히 조합원들의 전투성과 능동성을 자제시키느라 전전긍긍한다. 최근 철도노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계획에 맞서 기관사와 차량직종 노동자들이 앞장서 파업을 촉구했다. 하지만 3월 하순, 파업 시기와 방법을 위임받은 철도노조 위원장은 파업 명령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었다. 그러는 사이에 사측과 협상에 나선 노조측 대표들은 사측이 새로 낸 안을 사실상 수용하고 파업 철회를 약속했다.

사측의 안은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 기세를 우려해 강제전출 규모를 축소했지만,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고약한 안이었다.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결국 노사 협의의 결과는 파기됐다. 그러나 그 뒤에도 노조 위원장은 파업 선언을 하지 않았다.

결국 4월 4일 철도공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제전출을 확정하자, 일부 지부들은 즉각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차량지부 노동자들이 맨 먼저 전면 작업 거부에 나섰다.

그러나 노조 위원장은 지명 파업을 약속하며 지부 차원의 투쟁을 만류했고, 서울차량지부는 작업 거부를 중단했다.

서울의 기관차지부들도 파업을 결의하고 위원장에게 파업 지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조 위원장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투쟁을 결의한 기관차지부들과 차량지부들은 위원장의 파업 승인 거부에 직면해, 파업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채 단식과 농성 등의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자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 저버리거나 투쟁을 회피하는 것은 이해적인 일이 아니다. 국제와 국내 노동운동사에서 이런 일은 흔히 벌어졌다. 현장 투사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범파와 전략

'노동조합 지도자가 조합원들을 저버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조합원들은 대부분 '갈아치우지!' 하고 답할 것이다. 실제로 노조내 활동가들이 힘을 합쳐 기존 지도부를 더 좌파적인 인물로 교체한다는 '범파파' 전략에 기초한 노동조합 내 동아리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노동조합 지도자를 더 좌파적인 인물로 선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 안에서 좌파 지도부 선출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좌파 지도부의 당선은 투쟁하는 노조를 조합원들이 원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현장조합원 활동가들의 자신감을 높여 줄 것이다.

그러나 범파와 전략에는 근본적 약점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지도부를 좌파적 인물로 교체하면 노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와 국내의 역사적 경험은 노동조합 좌파 지도자들이 결정적 순간에 우파 지도자들과 비슷한 길을 추구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926년 영국 총파업 당시 퍼셀과 히스 같은 좌파 노조 지도자들은 우파 지도자들과 함께 파업을 철회하고 관원들이 출로 6개월 동안 싸우도록 방치했다.

이것은 서구만의 경향이 아니다. 1998년 정리해고제 도입 혐의로 불심판당한 민주노총 1기 지도부를 대신해 등장한 비대위(단병호 위원장)와 민주노총 2기 지도부(이갑용 위원장)는 연이어 파업을 철회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런 문제는 좌파 지도자의 개성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중재자 구실이 라는 노동조합 지도자의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만약 활동가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좌파 지도부 세우기 전략은 현장 투쟁을 대체하게 되고, 집행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 버린다.

그러나 승리의 열쇠는 누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현장조합원들이 얼마나 자신감 있는가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좌파 지도부 선출 운동이나 범파



작업 거부 중인 서울차량지부 노동자들

파 전략에 기초한 동아리에서 활동할 때, 현장조합원들의 불만이 민감하게 관여하고 투쟁 지지 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조합원 전략

그러나 범파와 전략과는 다른 투쟁 방법도 있다. 현장조합원 전략이 그것이다. 현장조합원 운동이 취하는 조직은 공식적인 노동조합 구조나 범파와 전략이 취하는 조직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현장조합원 운동 조직은 작업장 대표들로 이뤄진다.

둘째, 현장조합원 운동 조직은 지역이 아니라 작업장에 기반을 둔다.

셋째, 현장조합원 운동 조직은 작업장 내의 직종 구분을 뛰어넘는다.

현장조합원 운동 조직은 대안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에서 작업장에 기초해 조직되는 집단이다. 현장조합원 운동 조직은 작업장 조직화를 촉진해 노동조합 지도부의 배신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현장조합원 운동의 태도는 제1차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대표적인 현장조합원 운동 조직이던 클라이드노동자위원회의 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한 지도부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독자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 모든 작업장에서 파견된 대표자로 구성되고 낡은 규약과 규칙에 제약받지 않는 우리는 노동자들의 진정한 청서를 대변한다. 우리는 사안의 중요도와 현장 조합원들의 열망에 따라 즉각 행동에 나설 수 있다.

현장조합원 조직이 어떻게 등장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면, 현장조합원 전략이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영국의 1910년대 직장위원회 운동과 1930년대 버스 노동자 투쟁을 간단히 살펴보고 싶다.

1910~14년은 노동자 투쟁이 영국을 뒤흔든 시기였다. 제1차세계대전은 이 전투성을 잠시 중단시켰다. 이때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조합원들에게 속도 증가와 '노동 희석'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했다. '노동 희석'은 전쟁 노력을 위해 숙련 노동에 미숙한 노동자를 투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격렬한 저항을 낳았다. 핵심적 군수품 생산으로 협상력이 있던 금속 노동자들은 파업을 저지러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거슬러 비공인 대표를 어갔다. 이 운동은 직장위원회(노조의 작업장 대표를 기반으로 조직됐다. 이 현장조합원 운동은 사이트와 세필드의 금속 노동자 사이에서 영향력이 컸다.

서로 다른 노조와 작업장의 대표자들은 함께 모여 투쟁을 조율했다. 또, 이들은 정기적인 작업장 소식지를 내고 집회를 소집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자와의 전투를 준비했다.

직장위원회 운동은 '노동 희석'에 반대하는 주요한 파업들을 벌였는데, 가장 대규모 파업은 1917년 48개 도시에서 20만 금속 노동자들이 참가한 것이었다. 전쟁 시기 동안 직장위원회 운동은 노동계급에게 중요한 전진이었다.

1930년대 영국 버스 현장조합원 위원회 운동

1930년대 가장 효과적인 현장조합원 운동은 런던 버스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런던 버스 노동자 약 2만 5천 명은 TGWU(운송일반노조)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1932년 사측이 임금 삭감과 해고를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노동조합 지도부도 사측의 안을 수용하려는 입장이라는 게 알려졌다.

런던의 한 차고지는 이에 반대해 비공식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 33개 차고지 대표들이 참가했고, 나중에 현장조합원 위원회로 알려진 대표자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회에는 공산당원들, 노동당원들, 그리고 전투적 노동조합원들이 포함됐다. 현장조합원 위원회는 하루 7시간 노동, 강력한 노동시간제 반대 등 일련의 요구를 채택했다.

TGWU의 배신 사무총장은 사측의 안을 투표에 부쳤다. 현장조합원 위원회는 임금 삭감 반대 운동을 헌신적으로 벌였고, 결국 조합원들은 사측의 안을 거부했다. 배빈은 파업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사측은 임금 삭감과 해고 위협을 철회했다. 이것은 현장조합원들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 뒤 4년 동안 현장조합원 위원회는 사측과의 투쟁을 이끌었다.(노조 지도부와의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했다.)

현장조합원 운동은 해당 부문의 이주만을 다루지 않았다. 현장조합원 위원회는 반파시스트 행진 참가나 스페인 내전 지원 등 조합원들이 더 넓은 정치적 이슈에 동참하도록 애썼다.

1937년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현장조합원 운동은 사측과(불가피하게 노조 지도부와의) 중요한 투쟁을 벌였다. 버스 노동자들은 하루 7시간 30분 노동을 요구했다. 다시금 TGWU 배신 사무총장은 파업을 반대했고, 다시금 현장조합원들은 파업을 밀어붙였다.

1937년 5월 1일 버스 노동자들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만약 전차와 트롤리 버스 노동자들도 파업에 돌입했다면 확실하게 승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노조 지도부는 이를 거부했다. 버스 노동자들은 4주를 버텼지만, 노조 지도부는 버스 부문 파업을 중단하고 작업 복귀를 명령했다. 이는 현장조합원 위원회 리더들이 노조의 공식 파업에만 의존한 문제를 보여 준 것이기도 했다.

1937년 이후 버스 노동자들의 현장조합원 운동은 지속되지 못했다. 공산당이 1930년대 말에 현장조합원 전략을 버리고 그 대신에 좌파 지도부 세우기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장조합원 운동 조직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뿐 아니라 광범한 좌파 활동가들로 이뤄지지만,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적용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우려 하지 않을 때 현장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국제 노동운동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지금은 정세가 고강되고 계급투쟁이 매우 활성화된 상황은 아니므로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 현장조합원 전략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1910년대 영국 금속노동자들의 직장위원회 운동과 1930년대 영국 버스 노동자들의 현장조합원 위원회 활동을 보면, 철도노조 내 투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철도공사의 강제전출에 맞서 파업을 결의한 지부의 활동가들은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강제전출에 맞서 함께 싸울 지부들의 대표를 모아 투쟁위원회를 만들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야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지부의 사정은 어떤지 등을 논의하고, 투쟁 계획을 조율하며, 다른 지부들로 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과거지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지부별로 분산된 강제전출 항의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7월에는 기관사와 차량 직종의 대규모 강제전출이 예상된다. 바로 지금이 이런 교훈을 돌아보며 현장 투사들이 투쟁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김하영

프랑스 지방선거

파시스트의 성장이라는 먹구름 속에도 희망은 있다

3월 30일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 투표 결과는 23일에 치러진 1차 투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이하 FN)이 크게 성공을 거둬, 모두 11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차지했고, 지방의원도 1천 2백 명을 넘게 배출했다. 이는 FN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1995년보다도 나은 성적이다. 당시 FN은 4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었다.

FN은 대도시보다는 중소 도시에서 성공했고, 특히 실업률이 높고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성공했다.

집권당인 사회당(이하 PS)은 참패했다. 1백50여 곳에서 우파인 대중운동연합(이하 UMP)에 패배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빼앗겼다. 심지어 프랑스의 2대 도시 마르세유에서는 1차 투표 때 FN에게도 밀려 3위를 했다.

PS의 참패는 예견돼 있었고, 그 주된 이유는 PS의 배신이다. PS의 대표 프랑수아 올랑드는 강력한 반긴축 정서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할 수 있었지만, 진보적 사회 개혁 약속은 제대로 지킨 것이 없고, 기업주들에게 혜택을 주고 복지비를 삭감하는 등 긴축 정책을 유지했다.

그런데 PS 정부는 더욱 우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거 패배 후 내각을 개편하면서 PS 내 우파로 평가되는 내무장관 마누엘 발스를 총리로 임명했다. 발스는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동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지난해에 로마인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고, 35시간 노동제를 폐지하고 노동시간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지난해 프랑스 학생들이 로마인 강제추방에 반대하며 동맹휴업을 벌이고 강력한 시위를 벌였을 때 퇴진을 요구받던 자이기도 하다.

이에 PS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녹색당 소속의 장관들은 “발스가 이끄는 새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PS 소속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정부가 대선 때 약속한 반긴축 기조로 돌아가



사진 출처: Philippe Soussan (블라키)

반파시즘 투쟁의 불씨를 더 키워야 한다 2013년 10월 로마인 학생 추방에 항의하며 파리 시내를 행진하는 프랑스 학생들.

야 한다고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그 동안 국회에서 PS 정부의 편을 들어 줬던 좌파전선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발스를 총리로 임명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결선 투표에서는 1차 투표 때보다 기권율이 더 높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투표율이 아니라 기권율을 기록한다). 기권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생드니나 몽트레유처럼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기권율이 60퍼센트에 육박하기도 했다.(즉, 투표율이 4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됐다.)

이처럼 기권율이 높은 것은 주류 정당에 대한 프랑스 대중의 환멸과 염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같은 부패 추문과 스캔들이 폭로된 UMP도 대중이 염증을 느끼는 대상이었다.

이렇게 기권율이 높았던 것(특히 노동

자 거주 지역에서 기권율이 높았던 것)이 FN이 좋은 성적을 내는 데 크게 일조했다.

FN이 성장하는 데는 프랑스의 주류 정당들과 정부가 인종차별을 강화해 온 것도 한몫했다. 특히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을 배경으로 무슬림 혐오가 강해졌다. 대표 사례가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에 좌파들이 대부분 침묵하거나 동조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그러는 가운데 인종차별이 전반적으로 강해졌다.

게다가 세계경제 위기가 심해지자 연이은 정부들은 위기의 책임을 이민자에게 떠넘기려고 인종차별을 더욱 부추겼다. 2013년에는 프랑스 거주 로마인 약 2만 명이 추방당했다. 2012년의 갑질 수준이다.

이렇게 주류 정치권이 강화해 온 인종 차별 정서는 FN이 성장하는 좋은 토양이 됐다. 예를 들어, 2012년 대선에서 우파의 결집을 바라며 UMP의 후보 니콜라 사르코지가 인종차별적 정책을 내놓았을 때 FN의 후보 마린 르펜은 득의양양하게 이렇게 응수했다. “내가 원조다.”

파시스트 정당인 FN이 2012년 대선, 2013년 브리뇰 보궐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리 성공하는 상황은 광범하고 단결된 반파시즘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함을 뜻한다. 5월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FN이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만큼 좌파와 노동운동의 대응이 절실하다.

다행히 희망의 불씨가 보인다. FN이 결선 투표에 진출했던 생브리외에서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벌이는 등,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여러 곳에서 FN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들은 규모는 작았지만 파시즘에 대한 반감이 조직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3월 22일 파시즘·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의 일환으로 프랑스에서도 파리 등 세 곳에서 반파시즘 시위가 있었다. 프랑스 좌파들은 이런 가능성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좌파적 대안을 내놓으며 긴축에 맞선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그 래야 PS의 배신으로 생긴 공백을 좌파가 메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자본주의신당(NPA)과 좌파당이 4월 12일에 반긴축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파와 파시즘에 맞선 단결된 운동을 건설할 뿐 아니라, 올랑드의 PS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에도 맞선 실질적 저항을 조직해 낸다면 프랑스 정치의 우경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차승일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에서 인종차별 강화와 국민전선의 성장

123호에 실린 ‘파시스트 국민전선이 큰 성공을 거둔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 결과 — 단결된 반파시즘 운동 건설이 시급하다’에서 차승일 기자는 프랑스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며 국민전선(이하 FN)이 성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중 “주류 정치권이 강화해 온 인종차별 정서는 FN이 성장하는 좋은 토양이 됐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를 보충하는 논설을 내놓는다.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말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부터 이민자 차별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 걸프전과 특히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는 무슬림 차별이 거세졌다.

이런 맥락에서 1989년에는 한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여학생들이 히잡을 벗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퇴학당하는 일이 있었다. 2004년에는 아예 공립학교 교내에서 무슬림 여학생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고, 마침내 2011년에는 모든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파 니콜라 사르코지는 히잡 착용이 “여성을 차별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히잡 착용을 여성 차별의 상징



사진 출처: Sothian Silke (블라키)

무슬림 전통 복장을 입었다고 연행되는 무슬림 여성.

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무슬림 여성들이 모두 강압 때문에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무슬림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나 정치적 이유에서, 또 다른 여러 이유에서 히잡을 착용한다.

히잡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여성에게 바람직한 복장이 무엇인지 규정해 주겠다는 뜻이다. 그런 사회에서 여성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리가 없다. 그런 법은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는 도구일 뿐이다.

또한, 서구 사회에서 무슬림은 가장 천

대반는 집단이다. 히잡 착용 금지는 무슬림을 속죄양 삼는 수단으로, 위선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분명한 반대 입장과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프랑스 좌파들은 빠아픈 오류를 저질렀다. 2004년 노동자투쟁(LO)은 히잡이 “여성의 굴종”을 상징한다며 히잡 금지 법안을 지지했고,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 반자본주의신당 NPA의 전신)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모호한 입장을 취해, 반대 운동을 조직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이처럼 무슬림 혐오가 강화되는 가운

데 이민자 일반에 대한 배척 정서가 강해졌고, “국가 정체성” 사상이 강화됐다. 그 과정에서 주류 정치 담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 덕분에 무슬림 이민 반대를 ‘선명하게’ 주장하는 FN이 제도 정치권 내부에서 이전보다 더 커다란 지지를 획득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FN의 대표가 마린 르펜으로 바뀌며 FN에 대한 혼란이 커졌다. 마린 르펜은 겉으로는 유대인 배척이나 인종 간 불평등을 분명하게 주장하지 않으며 ‘탈악마화’ 전략을 구사했다. 그래서 이제는 일부 좌파마저 FN을 (파시스트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정상적인” 우파 정당으로 본다.

그러나 FN은 파시스트 정당이다. 예를 들어, 2012년 총선 때 FN의 후보가 좌파전선의 포스터를 부착하던 사람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FN의 간부 한 명은 “유대인을 태워 죽인 화덕은 세균을 박멸한 화덕과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FN은 의회 밖 폭력 단체와 은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고 좌파에 대한 폭력에 개입해 왔다. 이는 거리에서 소수 인종과 좌파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합법’ 정당을 표방하며 주류 정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파시스트 이중 전

략의 전형이다.

프랑스 좌파는 FN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광범하고 단결된 반파시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노동계급이 힘과 희망을 보여 줘야 한다.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대종파업이 좋은 사례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FN은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그해 겨울 당시 총리 알랭 쥐페가 공공부문 민영화와 공공부문의 연금과 임금 삭감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반해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일어났다. 2백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프랑스 노동자들은 3주 동안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었다.

노동자들의 힘에 밀린 쥐페 정부는 공격 계획을 철회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해야만 했다. 이 승리는 프랑스 지배자들에게 ‘쥐페 신드롬’을 안겨 줬다. 이 대종파업의 효과로 프랑스 정치는 좌경화했고, FN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에 FN은 위기에 빠져 심각한 분열을 겪었다.

요컨대, 프랑스 좌파에게는 광범하고 단결된 반파시즘 운동 건설과 노동자 운동 활성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사진 출처: NAP (블리커)

그리스 4월 9일 하루 총파업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가 갈마들며 거대한 투쟁을 낳다

4월 9일, 그리스 전역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 수십만 명이 긴축에 반대해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이날 파업은 2009년 이후 그리스에서 벌어진 30번째 하루 총파업이다.

2013년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들이 동시에 벌인 파업이기도 한 이번 파업에는 독일 총리 메르켈의 (11일) 그리스 방문에 항의하는 의미도 있었다.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는 구제금융을 주는 대가로 그리스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가디언>에 따르면, 트로이카가 바라는 수준으로 공공부문을 구조조정 하려면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노동자 12만 명을 해고해야 한다.

4월 2일 그리스 의회는 기업을 돕기 위해 규제 완화 조처를 대거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면허 있는 약사를 보유하지 않은 일반 슈퍼마켓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고, 꽤 오래된 우유도 “신선한” 우유라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의회는 공공 시설 몇 곳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리스 의회는 공공부문 노동자 4천 명 해고, 실업급여 삭감, 연금 삭감 등 노동자 공격 조처도 통과시켰다. 이미 실업률이 27.5퍼센트(청년 실업률은 57퍼센트)이고, 지난 몇 년 동안 노동자 임금이 30퍼센트 이상 삭감됐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의회는 올해 말까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트로이

카가 정한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크게 제약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공격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파업으로 이어졌다. 선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범그리스선원연합(PNO) 소속 노동자들은 3월 31일부터 48시간 파업을 벌였다. 선원 노동자들의 파업 둘째 날인 4월 1일에는 이 파업에 연대한 여러 노동조합이 도심에서 큰 시위를 벌여, 유로존 금융 각료 회의를 지키기 위해 도심을 통제하던 시위진압 경찰과 대규모 충돌을 빚었다.

노동자 6천여 명이 총파업 전날인 4월 8일부터 48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3월 22~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48시간 파업을 벌인 언론·방송 노동자들은 “총파업 날 [9일] 거리에 신문이 보이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총파업이 결정되고 실행된 것이다.

4월 9일 새벽부터 병원·교사·공무원 노동자 등이 파업에 돌입했고, 그리스 전체가 멈춘 가운데 노동자들의 행진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불만

반파시즘 투쟁도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본지가 지난 호(123호)에 보도한 3월 22일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성공은 노동자들을 크게 고무했다.

얼마 전 그리스 총리 안토니스 사마라스의 보좌관 파나기오티스 발타코스가 신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의 대변인 일리아스 카시디아리스와 밀담을 나누는 장면이 폭로돼 결국 발타코스가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 반파시즘 운동의 압력에 힘입어 황금새벽당 지도부 일부와 의원단 일부가 감옥에 갇힌 지금, 정부 고위 관료가 파시스트와 내통하고 있다는 혐의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도 그리스 정부는 심각한 지지율 하락에 처해 있었다. 신민주당과 사회당(PASOK)이 연립한 현 정부의 긴축 조치로 그리스는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흑자를 봐 다시 국채를 발행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리스 경제는 여전히 위기다. 그리스는 아직도 구제금융이 3조 원 가까이 필요한 상태다. 그동안의 긴축 조처가 위기를 해결하는 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긴축은 노동자들을 심각한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단적으로, 지난 3년 동안 1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전체 인구가 약 1천만 명이고 경제활동 인구가 약 5백만 명인 나라에서 말이다. 노동계급의 분노에 직면한 정부는 빈민들에게 일회성으로 풍돈을 나눠 주는 등의 ‘꼼수’ 복지로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 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위낙 나빠 이마저도 효과가 없었다.

신민주당과 PASOK에 소속된 의원은 점점 줄어 이제는 전체 의석의 과반을 간신히 넘는 수준인 1백51명이다. 의원이 한 명만 더 탈당하면 정부가 붕괴되는 것이다.

무능한 정부는 노동계급의 분노에 직면해 있고, 황금새벽당은 거대한 반파시즘 운동의 힘으로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황금새벽당 의원 16명 중 절반이 면책특권을 잃고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현재 그리스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좌파 개혁주의 정당인 시리자는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리자의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5월 유럽의회 선거에 도전하면서 긴축이 아니라 “불안정”을 끝내겠다고 했다. 이는 투쟁하는 노동계급이 아니라,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트로이카에 보내는 메시지다.

노동계급 투쟁의 일부인 그리스 사회주의노동당(SEK) 등 극좌파들은 나치를 감옥으로 보내고 나치에 협조한 정부 인사를 모두 사임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과 함께 계속되는 투쟁은 황금새벽당을 쫓아내려 할 뿐 아니라, 지배자들의 긴축 공세에 맞선 노동계급의 저항을 고무할 수도 있다.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가 서로 갈마들며 그리스는 혼란에 빠져 있고, 혼란 때문에 터지는 계급투쟁은 단호하게 투쟁을 건설하는 좌파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김준호



사진 출처: KT민주동지회

‘명예퇴직’, 임금·복지 축소, 아웃소싱

KT ‘구조조정’ 중단하라

이원준 KT 노동자, KT민주동지회 회원

KT 경영진이 4월 8일 ‘명예퇴직’, 복지 축소, 아웃소싱 등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또다시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고통을 예고하는 것이다. 게다가 친사용자 노조 집행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 현장조합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노사합의서를 보면, 사측은 기존의 근무 기간 20년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 ‘명예퇴직’ 제도를 폐지하고, 15년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측의 압박을 버티며 ‘정기 명예퇴직’을 기다리는 것을 차단하려고 대학 학자금 지원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임금파크제도 도입해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더구나 ‘사업 합리화’를 명목으로 가정용 통신 분야의 영업, 개통·A/S 등의 업무를 자회사로 이관(아웃소싱)하기로 했다. 1만여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것이다.

사측과 노조 집행부는 이런 결정이 ‘경영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KT의 적자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사업(BIT사업)에 따른 손실액 2천7백억원을 임의로 회계 처리해 만들어 낸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전임 회장 이석채를 비롯한 낙하산 경영진의 경영 실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비리 주범 이석채는 구속 수사로 피해 가며 지난해에만 30억 원 가량을 연봉으로 챙겨 갔다. 이런 자들은 놔두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배신적 합의

고약하게도, 친사용자 노조 집행부는 사측의 이런 구조조정안을 승인해 버렸다. 단협에 보장된 고용과 복지를 다 내줘 놓고는 조합원 찬반투표조차 생각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등에 칼을 꽂은 노조 집행부의 배신적 합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노조 내 민주파 활동가들이 모인 KT민주동지회가 문자 전송을 통해 실시한 긴급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참가자 2천5백여 명의 95퍼센트가 구조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91퍼센트가 집행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십수 년간 이어진 KT 구조조정의 역사는 민영화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낸 끔찍한 잔혹사였다. 민영화 이후 2003년에 5천5백여 명, 2009년에 6천여 명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직장에서 쫓겨났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민영화 이전 6만 명이 넘던 직원 규모는 3만여 명으로 반토막 났다. 남은 직원들도 노동강도 강화, 실적 압박, 임금·복지 삭감에 시달렸다.

친사용자 노조 집행부는 이런 회사 정책의 믿음직한 파트너 구실을 해 왔다. 그들은 조합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려 하기는커녕 사측의 공격을 정당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조합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왔다.

그런 노조 집행부가 말하는 ‘고통 분담’이 아니라 단결된 투쟁만이 일자리와 임금을 지켜낼 수 있다. 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동지회는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구조조정안 파기와 위원장 탄핵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건설해 가기로 했다. 이 속에서 배신적 야합을 한 지도부도 심판할 것이다.



포항에서 진행된 대규모 한미 연합 상륙훈련 "쌍용 훈련".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겪은 미국

만회할 기회를 찾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4월 하순 오바마의 한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히자,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미·일이 북한에 요구해 온 비핵화 사전 조치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마도 이대로 가다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 향상돼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 단계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즉, 상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까지 나아가지 않거나, 잠시나마 북핵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질서가 그대로 있고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는 언제나 긴장이 불거질 수 있다고 김영익 기자는 경고한다.

3월 28일 박근혜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을 내놓았다. 거기서 박근혜는 인도적 문제 해결, 인프라 구축 등 몇 가지 대북 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싸늘했다. “낮간지러운 수작”이라는 원색적 용어까지 동원하며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박근혜가 최근 북핵 문제에서 강경한 자세를 고수한 것과 관련이 있다. 드레스덴 선언에 앞서 박근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등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 핵문제를 부각시키며 대북 압박과 제재를 촉구했다. 박근혜는 핵안보정상회의 개막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비난하며 대북 제재의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면, 드레스

덴 선언의 핵심 제안들은 여전히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와 결합돼 있다. 박근혜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 그러나 북한 지배 관료가 보기엔, 확실한 ‘보장’ 없이 핵무기부터 포기하라는 요구는 섣뽕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설전
드레스덴 선언을 둘러싼 남북 간의 공방도 문제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이 여전히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 ‘위협론’은 미국에게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패권을 유지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이번에도 오바마 정부는 북한 ‘위협론’을 이용해 한·일 정상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

었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의 논의를 발판 삼아 MD(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3국의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하려 한다. 한·일 군사협정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체면이 깎인 미국이 이를 만회할 기회를 찾는 것도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막지 못하자,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다. “크림반도 사태 이후 미국이 동·남중국해 충돌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 나라들에도 확산되고 있다.”(〈도쿄신문〉) 이런 와중에, 4월 8일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 척 헤이글이 중국 국방부장 창완취인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척 헤이글은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면 미국은 일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러 시비를 거는 듯한” 척 헤이글의 발언에 창완취안은 “영토 수호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응수했다. 이 설전 과정에서 북한 문제도 거론됐다. 척 헤이글이 “중국이 도발적이고 위험한 북한을 계속 지지하며 스스로 국제적 지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난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자국 패권을 유지하려고 북한 ‘위협’론을 이리저리 휘두르자, 북한도 다시 반발하며 군사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은 2월 말부터 단거리 로켓과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다. 이것은 B-52 전략폭격기까지 공개 동원한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하는 성격이 컸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에 북한은 노동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기도 했다.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겨 규탄 성명이 나오게 했다. 그리고 3월 27일~4월 7일에 진행된 쌍용 훈련을 언론에 공개해 북한을 자극했다. 이 훈련은 미군과 한국군 1만 2천5백여 명과 최첨단 무기가 대거 투입된 연합 상륙 훈련인데, 1990년대 팀 스피리트 훈련 이후 최대 규모의 상륙 훈련이었다.

쌍용 훈련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도 더 강경한 군사 대응을 했다. 3월 30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훈련을 미국이 걸고 넘어질 경우,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3월 31일 북한은 서해 NLL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쌍용 훈련에 대한 맞불 훈련의 성격이 컸다. 이때 남한군도 대응 사격에 나섰는데, 자칫 2010년 연평도 상호 포격 사태 때처럼 대규모 교전 사태로 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3차 핵실험 이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언급되는 상황은 분명 우려스런 일이다. 명분이 뭐가 됐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지지할 수는 없다. 5살 미만 아동 중 28퍼센트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막대한 자원을 군비에 쏟아붓는 것은 진정한 사회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핵무기는 남한·일본의 노동계급과 평범한 민중의 다수를 절멸시킬 대량살상무기이며, 그런 점에서 북한 핵무기는 제국주의에 맞선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높아지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제국주의적 패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후진 독재 국가인 북한을 ‘악마화’하고 이에 남한과 일본이 호응하면서, 한반도가 계속 불안정에 휩싸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무인기 소동으로 박근혜가 노리는 것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발견됐다. 이후에 백령도와 삼척에서도 비슷한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인기의 카메라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일부 군사 시설을 찍은 사진들이 나오자, 우파들은 “북한한테 군사적 기습을 당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구글 어스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카메라를 달았고 심지어 사진을 송신할 수도 없는 조잡한 무인기를 두고 말이다.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은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가 남한의 대학 연구실이 만드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편 같은 우파 언론들은 별 근거도 없이 연일 북한 무인기가 생화학무기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거나,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로 청와대나 핵발전소를 파괴하는 시나리오 따위를 쏟아내면서, 북한 ‘위협’을 엄청나게 부풀리는 데 열을 올렸다. 여기에 박근혜도 가세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미국과 함께 북한 상공을 최첨단 위성과 정찰기로 물샐틈없이 감시하는 남한이 북한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미 남한은 가공할 수준의 공격형 무인기 — 진짜 드론! — 을 운용하

면서 북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는 북한 ‘위협’론을 과장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쟁에 이용할 것이다. 북한 ‘위협’론은 한·미·일 동맹 구축이나 남한 군비 확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이른바 “북풍”을 내세워 대중 정서를 조금

이라도 경색시킬 수 있다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고 노동자 투쟁을 단속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다. 노동운동 투사들은 우파의 ‘안보’ 호들갑에 흔들리지 말고, 박근혜의 착취 강화 정책에 맞서 전투적인 저항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맑시즘2014

※ 맑시즘은 14년째 열리는 대규모 마르크스주의 포럼입니다.

일시: 8월 7일(목) ~ 10일(일)
장소: 서울
주최: 노동자연대

추천 소책자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오늘의 동아시아 불안정과 한반도
김하영·김영익·이현주 지음, 4,000원, 128쪽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편지

4월 23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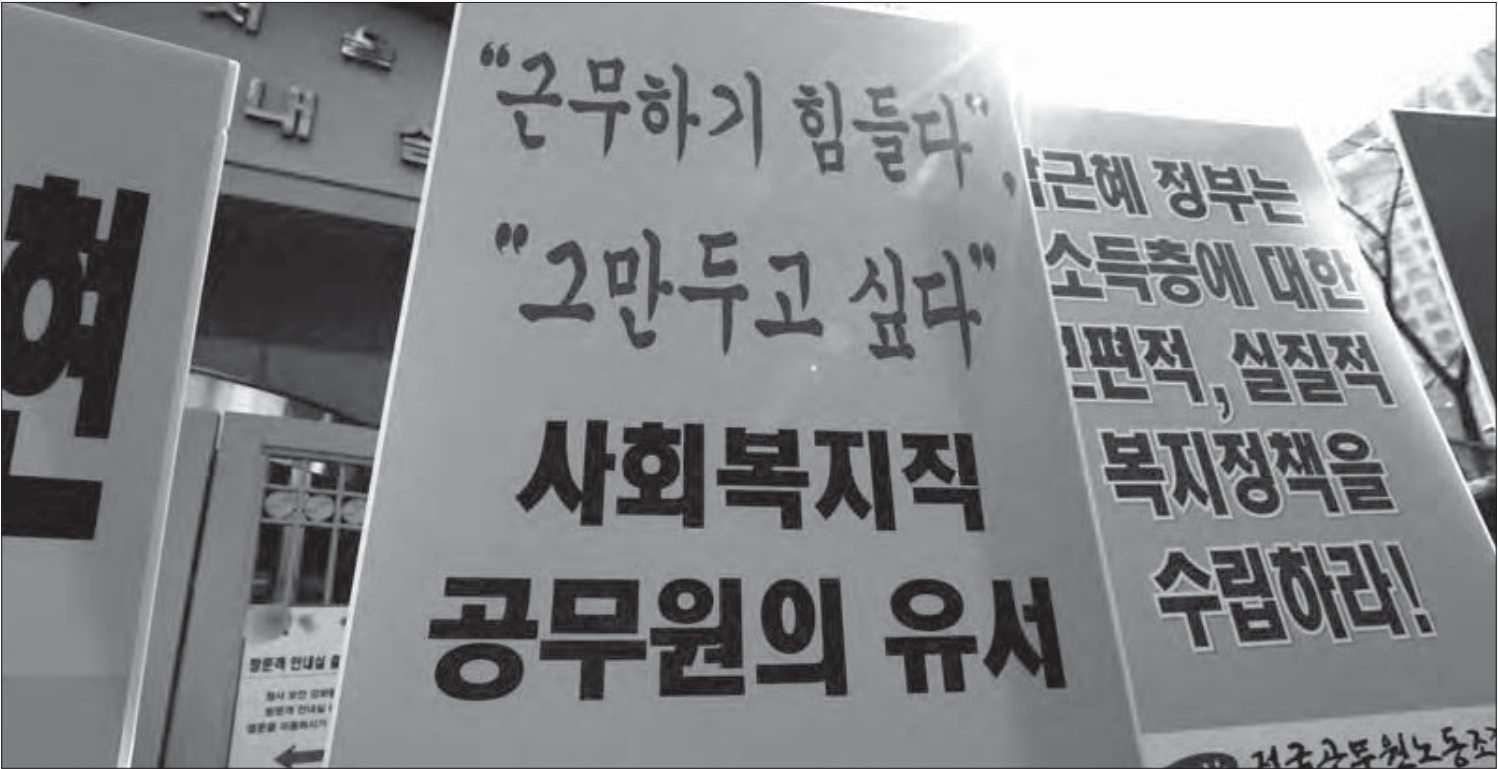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복지는 없다”

지난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깝게도 자살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일단 거리로 나섰지만 밀려오는 것은 한숨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생색내기 일회용 행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사각지대를 발굴해도, 부양의무제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 또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 수급자 발굴보다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 탈락시키는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 정책의 방향이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비율이 2002년 전체 인구 대비 3.2퍼센트(1백55만 명)에서 2013년 2.6퍼센트(1백35만 명)로 줄었다. 게다가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이 무척 좋지 않다. 송파구 세 모녀가 살던 석촌동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명이 복지 대상자 1천53명을 맡고 있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복지 재정은 54퍼센트, 복지 사업 수는 45.5퍼센트, 전

체 복지 대상자 수는 3배 증가했지만, 복지 담당 공무원은 11.7퍼센트밖에 늘지 않았다.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 수는 2백11.8명에서 4백92.1명으로 2.3배나 증가했다. “갈때기 인생”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갈때기 인생”이라고 말한다. 중앙 정부의 온갖 복지 업무가 갈때기처럼 자신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노인 등 손가락 발가락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가지수의 업무를 해야 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처럼, 죽어라 일하는 것은 노동자들이고 생색은 박근혜 정부가 낸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마음의 병도 많이 호소한다. “세 모녀 사건으로 자살한다고 전화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자살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죽기라도 한다면 그 정신적 충격이란 다 어찌 할까요. 집에 가서도 불안합니다.” “복지 쪽은 하루 종일 어두운 쪽을 상담하고 보

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말들을 들으며 그걸 풀지 못하고 하루하루 일을 해요. 그러다가 본인도 모르게 회의감 들고 우울해지고... 복지사들에게 복지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복지가 필요한 국민입니다.” 앞으로 복지는 더 중요해지고 비중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인원 확충 없는 복지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만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자살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아 저임금으로 많은 일을 시키려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과 직결돼 있다. OECD 평균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한 양질의 복지를 제공하려 한다면, 공무원 수를 늘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직렬에 상관없이 단결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반대, 인원 확충 등을 요구하며 싸울 때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최수진 공무원 노동자



한국의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OECD 평균의 30분의 1 수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과 직결돼 있다.

‘수만 명이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맞서 행진하다’를 읽고

김준효 기자가 <노동자 연대> 123호에 쓴 ‘3월 22일 인종차별 · 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 — 수만 명이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맞서 행진하다’ 기사 내용 중 사실관계 두 가지를 바로잡으려 한다. 첫째, 김준효 기자는 3월 22일 이후 4월 10일과 4월 30일에 후속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중 4월 10일 행동이라고 소개한 것은 사실 4월 9일에 조직된 그리스 양대 노총의 반긴축 하루 총파업이었다. 4월 30일은 황금세벽당 국회의원에 고용된 변호사가 고소한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

자 연대>의 편집자, 발행인, 기자의 재판이 열리는 날로, 이에 항의하는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 연대>의 활동가들은 반파시즘 운동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온 것에 보복성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므로, 이에 항의하는 행동은 반파시즘 운동에서 중요성이 있다. 둘째, 김준효 기자는 기사에서 “최근 반파시즘 운동에 밀린 정부는 황금세벽당 소속 의원 7명의 면책특권을 박탈했고, 이 의원들은 제 앞가림이라도 하고자 의원직을 사임해야 했다”고 썼다. 그러나 그리스 의회는 이달 초 황금세벽당 소

속 의원 5명의 면책특권을 추가로 박탈해, 현재까지 8명의 면책특권을 박탈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외에, 총선에서 선출됐던 황금세벽당 소속 의원 18명 중 2명이 범죄 조직 결성 혐의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려고 황금세벽당을 탈당해서, 현재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정리하면, 황금세벽당 소속 국회의원은 현재 16명이며, 그중 절반이 의원 면책특권을 박탈당한 상태인 것이다.

차승일

곰팡이가 쏴먹는 노동자 기숙사를 바꾸기 위한 투쟁

무너져 가는 기아자동차 화성기숙사가 기숙사 자치위원회의 투쟁으로 개선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물이 새고 곰팡이가 쏴먹는 23년 된 기숙사를 수년간 방치해 왔다. 식단비도 10여 년째 인상 없이 1천3백 원이다. 그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아 개선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회사는 기숙사의 문제를 알면서도 방관해 왔다. 나를 비롯해 이런 회사의 행태에 분개한 입사 1~2년차 조합원들로 구성된 22대 기숙사 자치위원회(2012년 10월~, 이하 자치회)는 그동안 방치돼 온 낡은 시설물들과 비품 등에 대해 수차례 실태조사와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숙사 개선안을 작성하고, 식당에 대차보를 부착하는 등 기숙사 문제를 개선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자치회가 조합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기반으로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지난해 초 일부 노후한 비품 교체, 휴게실 냉 · 난방기 설치 등 사측에게 일부 양보를 얻어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식사 질 개선, 기숙사 리모델링 · 신축 등)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자치회는 기숙사 안에서만이 아니라 화성공장 내 전체 조합원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해 기숙사 문제를 알렸고, 선배 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조합원들은 분개하며 공감과 지지를 보내 줬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 자치회는 기숙사 시설 개선 관련 안건을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의원대회에서 “기숙사 노후 및 신축건은 [기아차 화성공장] 지회 정기 대의원대회 사업계획 속에서 논의한다”고 결정됐다. 그동안 화성공장 지회는 기숙사 개선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지부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에도 불구하고 화성지회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기숙사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회 집행부는 자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기숙사 시설을 보수하는 데 “[사측이] 6억여 원을 지원”하겠다고 사측과 협의했다고 한다.

물론 6억여 원으로 시설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측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6억 원을 책정했고, 그것도 구두약속만 했다. 또 자치회가 요구해 온 전면적인 리모델링 및 신축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자치회는 전면적 리모델링과 신축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업계 5위, 그룹사내 유보금 1백조 6천억여 원을 쌓아 둔 현대 · 기아 그룹에게 이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이다. 조합원들의 피와 땀으로 천문학적인 수익 창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자치회의 투쟁은 미약하나마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년여간 조합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성과를 얻어냈듯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생각이다.

이명환 기아차 노동자

부자들에게는 세금 인하,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은 3월 월급 명세서를 받고 임금이 삭감된 것을 알았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당연히 1호봉 상승했고, 공무원 보수도 1.7퍼센트 인상됐다. 정부는 1.7퍼센트가 물가상승률 수준이라고 우기지만 말이다. 아무튼, 법원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10여만 원이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실수령액은 10여만 원 삭감됐다. 이유는 시간외수당이 지난해 3월과 비교해 20여

만 원이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0일 전국 법원에 ‘2014년도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인건비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통제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제한 시간까지 특정하며 수당 지급을 줄이라고 압박했다. 공무원 노동자는 계급과 호봉에 따라 촘촘하게 짜인 봉급표에 근거해 보수를 받는다. 1년마다 호봉이 오르는 대표적인 연공급제이기 때문에 적게나마 임금

이 인상돼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실수령액이 삭감된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명백한 임금 삭감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히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시간외수당 집행을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해 조삼모사식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공격할 것이라 하고, 언론은 국가 부채의 책임을 연금 탓으로 돌리는 악의적 보도

들을 계속하고 있다. 벌써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노동자들의 당직비와 (출장 업무가 상시적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를 삭감하고,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노동자들의 기성회비 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등 공격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공급제에 따른 고임금이 문제라며 50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자고 한다. 게다가 각종 전산화 작업을 이유로 인력은 감축되고 그에 따라 업무는 점점 힘

들어진다. 잇을 만하면 어느 법원의 젊은 노동자가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까닭이다. 결국 경제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이 있고, 부자와 재벌의 세금은 깎아 주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야금야금 깎아 먹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가 갈수록 월급이 줄어드냐’, ‘희망이 안 보인다’는 하소연과 불만을 모아서 투쟁에 나서야 한다. 희망은 투쟁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거리를 가득 메운 2백만 명의 건축 반대 시위대 노동조합이 3월 22일 시위 건설에 핵심적 구실을 했다. 광범한 피억압 민중 운동은 조직 노동운동과 결합될 때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서평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聖人

도시에서 성인이 되기는 어렵다

데이비드 하비는 현재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 중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마르크스 《자본론》 강독 동영상 조회수는 수만 건을 넘었고, 그가 2011년 11월 아 이작 도이처 추모 강연을 했을 때는 런던 중심부에 있는 퀘이커교 예배당이 가득 찼다.

하비는 특히 공간과 위치가 현대 자본주의 동역학 속에서 하는 구실에 초점을 맞추며 지리학 분야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지리학은 물론이고 마르크스주의 자체의 지평을 확장하는 업적을 남겼다.

이 책은 수년간 하비가 발전시켜 온 주장, 즉 현대 도시와 그 변두리의 형성 과정인 ‘도시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매우 간결하게 서술됐고, 이해하기 쉬우며, 많은 학술적 마르크스주의 저자들이 잘 사용하는 여러 전문용어들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비는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파괴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는 그 둘 모두를 위해서는 도시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또는 전통적인 좌파가 대부분 도시화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도시화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위기에 빠지는 데서 일정한 구실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건설 투자로 형성된 대도시들은 자본주의가 창출한 잉여를 흡수하는 데서 결정적 구실을 했다. 동시에,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명백하게 보여 주듯이, 주택 시장은 위기를 빈번히 촉발한다.

하비는 자본주의에서 도시가 중심적 구실을 하므로 좌파가 도시에 초점을 둔 운동을 훨씬 더 만만찮게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책 제목에서 언급된 “도시에 대한 권리”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본주의에서 흔한 개념이자 많은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개인적이고 협소

한 재산권이 아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개조되는 도시화 과정에 대한 권력을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형성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현존 좌파가 소외 집단이나 전통적 노동계급에 집중함으로써 그러한 투쟁의 중요성을 무시했으며,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공공 서비스와 공공 공간에 대한 접근권과 시민권 등을 요구하는 도시 운동과 도시 운동 조직이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투쟁에서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범주

하비가 내린 결론은 대부분 동의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결론이 어느 정도는 모호해서 동의할 만한 것이므로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런 모호함은 어느 정도는 그의 진솔함과 겸손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비는 자신이 모든 문제의 답을 안다거나 남들보다 많이 안다는 식으로 아는 척하지 않는다. 이는 그의 장점이다. 그러나 하비의 주장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뭔가 더 논쟁적이고 발본적인 것을 말하려다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비는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반

자본주의 투쟁에 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도시 혁명에 관한 여러 “테제”를 제시한다. 그중 하나는 “파업에서 공장 점수에 이르는,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한 투쟁이 주변의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모인 대중의 지지를 강력하고 활력 있게 받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누가 이를 부인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말이다.

그러나 다른 테제는 더 까다로운데, “노동의 개념은 노동의 산업적 형태에 고착된 협소한 규정에서 벗어나 점점 더 도시화되는 일상생활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데 수반되는 것 일체로 그 범주를 훨씬 더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주장은 노동과 노동계급 개념을 그저 전통적인 공장 노동자로 국한하지 말고 생산하는 사람들 전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자는 중요한 주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주장은 중요한 차이점을 은폐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하비가 노동계급의 범주에 누구를 포함시킬지를 언제나 분명히 밝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관점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도시 거주

자를 거의 모두 포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후자의 한 가지 문제점은 하비의 용어로 도시 “재생산자”들이 모두 똑같이 강력하지는 않으며, 자본주의를 약화시키거나 그 기능을 정지시킬 능력을 모두 똑같이 갖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하비는 “배달 트럭 수천 대가 매일 뉴욕 거리에 꼭 차 있다. 그 노동자들이 조직된다면 도시의 신진대사를 가로막을 힘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특정 노동자 집단의 잠재력을 잘 포착한 중요한 통찰이지만, 도시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런 힘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비가 언급하지 않은 비슷한 사례로 2011년 영국 전기 기사들의 투쟁이 있다. 이런 투쟁들은 도시 안에서 전투적으로 조직된 노동자 집단이 가진 힘을 보여줬다. 그 노동자들이 하는 노동의 특성상 그들의 활동은 큰 효과를 냈고 결국 승리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힘이 도시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나는 그들을 일차적으로 도시를 생산하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 전기 기사들이나 그들에게 연대를 보내는 사람들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정확히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도시적인 것?

하비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을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직접 언급한 부분도 있으므로 그에 응답해야 한다. 하비는 2011년 11월 《히스토리컬 머티리얼리즘》[역사유물론] 대회에서 했던 말을 [책에서도] 되풀이하며 SWP가 “1980년대에 대처의 주민세에 맞선 성공적인 투쟁을 이끌었다”고 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과찬이고, 아마도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 말 또한 하비 주장의 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은 “그것 봐” 하는 식으로 의도된 것이다. 그 속에 함축된 바는 “당신들은 공장과 노동자가 중요하다

고 하지만 사실 당신들이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으로 개입한 것은 시민권과 세금을 둘러싼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판은 오히려 하비 자신에게 해당된다. 우선, 정말로 도시적인 것이 무엇인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가 살던 지역의 동지들은 주민세 반대 투쟁은 대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거듭 말했다. 또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비보다 “전통적인 좌파”가 해당 쟁점의 계급적 성격을 더 잘 포착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비가 만만찮은 문제들을 만만찮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비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광범하고 다양한 노동계급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작업장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상황(아예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다)에서 중요하다.

이 책에 제시된, 도시 차원에서 조직하기라는 생각은 확실히 호소력 있고,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하비에게 미래를 위한 새로운 매니페스토[강령]나 지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그것은 과도하다.

그러나 나는 하비에게 더 많은 것을 바란다. 이 염원은 마지막 두 장을 읽으면서 더 커졌다.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두 장은 런던 소요 사태에 대한 짧은 논평과 월가의 점거하라 운동에 대한 찬사로 이뤄져 있다. 그 두 장에서 계급과 생산에 관한 구체적 논의들은 희미해지고, 그 대신 차별받고 착취받는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한 연합에 대한 논의가 다뤄진다. 이 부분은 책의 나머지 부분과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만일 이것이 하비가 자신의 흥미로운 분석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애석하기 짝이 없다.

댄 스웨인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35호 / 번역 이진화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데이비드 하비 지음, 한성연 옮김
에이더스, 300쪽, 18,000원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설립

케이블방송·통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했다.

지난해 희망연대노조 소속 씨엔앰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파업과 투쟁에 나서 노동조건을 개선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통신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한 것이다.

통신과 케이블 방송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올려 왔다.

그러나 통신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토요일 정상근무에 일요일 당직까지 있다 보니 월 평균 2~3일 쉬는 게 고작이다.

이런 장시간 노동에도 임금은 형편없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외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도 일절 없다. 상당수 노동자들은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유류비, 통신요금, 자재 구입비, 명찰·명함 제작 비용 등도 모두 노동자들의 몫이다.

이도 모자라 각종 페널티 명목으로 월급에서 수십만 원씩 빼이기도 한다. 고객에게 민원이 들어와 원청(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이 각 센터(하청업체)의 평가 등급을 낮추면, 해당 기사들의 월급이 깎이는 일은 예사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하고 떼이는 비용이 매달 70여만~90만 원에 이른다.

이렇게 끔찍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노동자들을 “행복 기사”라고 부르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노동자들은 다단계도급, 소사장제, 개별도급(건당 수수료) 등 온갖 간접고용 형태로 복잡하게 고용돼 있다. 심지어 한 센터(협력업체) 안에서조차 고용구조가 각기 다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근무복, 명함, 명찰에는 모두 SK나 LG 마크가 있다. 또 원청이 직접 교육, 업무 지시, 평가 등을 감독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위장도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더는 이런 현실을 참고



대형 통신사들로 확산된 노동조합 결성 케이블 노동자들의 투쟁이 통신사 비정규직 조직화에 밑거름이 됐다.

인내하지 않기로 결단”해 노조를 만들고, “행복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행복해지기 위한 인간선언”을 했다.

노조가 설립되자 사측은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하며 노조 탈퇴 협박을 하고,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매일 수십 명씩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이미 조합원이 1천여 명에 이른다. 노동자들의 분노와 자신감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통신과 케이블 방송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장들은 이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동자들에게 더한층 실적 강요와 경쟁 압력을 넣고 있다.

사장들이 피 땀기는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로 조직돼 공동 투쟁을 시작한 것은 의미가 깊다. 노동자들은 공동 투쟁 속에서 사장들이 강요하는 경쟁이 아니라 진정한 노동자 단결과 연대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우리 회사 잘 돼야 직원들도 잘 된다’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서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더 유리하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케이블방송·통신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과 투쟁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투쟁 등 다른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에도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씨엔앰,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4개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시작했다. 진정한 노동자 연대를 보여 주는 케이블방송·통신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유병규·조명지



보라매병원은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복직시켜라

지난해 말 시립 보라매병원이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해고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내세운 해고 사유였다.

해고 통보를 받을 당시 이 간호사는 임신 14주였다.

보라매병원은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병원이다.

해고된 간호사는 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1년 9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무기계약 전환 3개월을 앞두고 해고됐다.

이 간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보라매병원과 서울시청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수술실의 동료 간호사들도 ‘보라매병원 수술실 임신부 비정규직 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 서명에 참가했고, 이 서명은 조합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간호사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하루 8시간 정규직 간호사와 함께 수술실에서 성실히 일했고, 6개월 단위로 평가를 받았는데, 임신 이후 부당하게 낮은 평가를 받아 해고됐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임신을 했다는 것 하나다.

“업무평가를 한 동료들에게 80점대 초반 점수를 주라는 수간호사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병원 측은 처음에는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관리자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병원장의 병가를 이유로 해고를 미루고 있다.

해고된 간호사는 태아에게 해로운 약품과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수술실에서 일해, 임신 초기부터 그 사실을 수간호사와 주변 동료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수간호사는 단체협약에 보장된 유급 검진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심지어 계약완료 2주 전에 해고 사실을 알려줬고, 그 자리에 다시 비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실이 보라매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을 보면,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13명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한 사람은 20명이나 된다.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보라매병원이 상시업무 자리에 계약직 비정규직 간호사를 계속 사용해서 서울시 고용 방침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고된 비정규직 간호사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라매병원을 운영하는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말에도 시설관리 하청업체를 변경하면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서울시와 보라매병원은 해고된 비정규직 간호사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고은이

기아차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차별 시정 위해 정규직이 연대하자

4월 10일 기아차 화성공장 본관 앞에서 사내하청 분회 주최로 ‘특근 지원금 지급·통상임금 정취·김수익 복직 합의 이행’ 촉구 중식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 비정규직 조합원과 정규직 활동가 1백여 명이 참가했다.

김수익 동지는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며 원직 복직 합의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8년간 해고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동우 동지의 복직도 강조했다. 이를 지켜보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분노했다.

김수익 동지는 2007년 파업 투쟁을 이유로 사측이 고소·고발을 해 구속됐고, 2년 6개월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김수익 동지에게 하청 사측은 출근하라는 통지를 보내 놓고는 “출근하지 않는다”며 해고했다.

김수익 동지는 그 후 5년 동안 정든 일터로 돌아오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했다. 그는 자신의 복직 문제뿐 아니라 전국의 비정규직 투쟁에 항상 연대하고 헌신했다. 그는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전국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인 인물이



김수익 동지의 복직을 촉구하는 홍보전.

기도 하다.

사측은 이 때문에 김수익 동지를 쉽게 복직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측이 합의서 이행조차 하지 않으며 무리수를 두는 이유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양경수 분회장은 “사측이 비정규직에게 특근 지원금을 정규직의 30퍼센트밖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김수익 동지 복직과 함께 특근 지원금 차별 해소를 위해 4월

12일에는 화성 공장에서도, 19일에는 화성·소하리·광주 공장에서 특근 거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측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차별하는 것은 정말로 비열한 짓이다. 정규직 지회가 비정규직 투쟁에 지지·연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현장 조직’(노조 내 동아리)들이 사내하청 분회 집회에 참가하고, 공동 리플릿 발행과 퇴근·중식 홍보전, 현장순회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활동을 하기로 결의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아직까지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가 충분치는 않지만, 이런 활동을 확대·강화해 비정규직 투쟁에 힘을 보태야 한다.

김수익 동지처럼 징계해고·고소고발·손배 등 현장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조립3부 1A반 동지들과 함께 공동 투쟁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아차지부와 화성지회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연대하자.

김우용 기아차 화성지회 조합원



임금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김문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에는 여야 의원들, 고용노동부, 사용자 단체들, 한국노총의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조차 참여하지 않아 용도 폐기”된 “노사정위원회를 되살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 꼼수”라고 올바르게 비판했다.

노사정소위는 4월 15일까지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각종 노동 현안에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사용자 단체들과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강요하기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에 더해 1주일에 최대 12시간 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정의한 점을 악용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지침으로 내려 왔다. 즉, 사용자들이 주중에 12시간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주말 이를 동안 최대 16시간(하루 8시간씩)을 또 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당 68시간 노동을 보장해 준 것이다.

그러나 주당 40시간 노동 외에 일한 것은 모두 ‘시간 외 연장근로’다. 노동부 해석은 주말은 일주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또한 주중 40시간을 일한 노동자가 휴일에 더 일하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노동부 해석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최근 법원은 노동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고, 이는 조만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노동시간은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고, 휴일 연장근로에



단결과 투쟁 임금과 노동조건의 상황 평준화를 이루려면 투쟁력과 조직력이 있는 노동자들이 앞장서는 방식으로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대한 체불임금 소송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사정이 이러니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은 그 전에 근로기준법을 개악해 불리한 판결을 피하고 장시간 노동 강요하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단계별 시행 등 온갖 꼼수 법안이 나오는 이유다.

책임 전가

한편, 장시간 연장근로에 따른 비용을 줄이도록 정부가 도운 것은 자본가들이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을 쥐어짜는 게 더 ‘생산적’이도록 보장해 준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자들이 이제 와서는 경제 위기와 수익성 하락에 직면해, 연공급제를 빌미

로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 탓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 분열과 전반적 임금 하락을 유도하려 한다.

그러나 한국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이 18.1퍼센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OECD 평균은 36.4퍼센트). 이런 현실 때문에 실제 노동자 평균임금은 40대 후반 이후 하락하고 있다(김유선,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한국 자본주의 전체로 보면, 연공급제가 진정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투자 대비 이익의 (수익성) 위기다.

물론 이 와중에도 SK 최태원의 연봉은 3백억 원이 넘었고, 삼성 이진희는 지난해 주식배당으로만 1천억 원 넘게 챙겼다.

최근 10여 년간 기업소득은 늘고, 가계소득은 줄어 왔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 추세이기까지 하다.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수준이 돼야 그나마 실질임금이 유지되는데, 사용자들은 상용직 임금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조차 실질적 인상을 거부해 왔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평균임금조차 민주노총이 자체 계산한 표준생계비 대비 70퍼센트가량에 불과하다.

한편, 노동부 임금 개악 매뉴얼이 병원 간호사, 은행 사무직, 제조업 생산직의 임금체계 변경을 특별히 예시로 든 것도 시사적이다. 병원 간호사의 성과주의 강화는 의료 민영화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최근 수익성이 오르지 않은 은행권은 인력 감축 시도가 있을 듯하다. 벌써 씨티은행에서 감원 시도가 시작됐다. 제조업은 통상임금 정정이 민감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조선 등 일부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과연 임금 개악을 당장에 전면화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너무 많은 노동자들을 한 번에 상대하는 건 벅찰 수 있다.

그래서 실제 투쟁 양상은 개별 기업마다 불균등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고임금을 문제 삼아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하는 효과는 지금부터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간질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반격의 조건이 되는 곳에서부터 파열구를 내야 할 것이다.

상대적 고임금이 문제인가

최근 노동부의 임금 개악 매뉴얼이 임금체계 개편 논란을 촉발하는 가운데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자들도 연공급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핵심 취지는 상대적 고임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늘려 노동계급 내부의 형평성과 단결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의도를 떠나 자본의 분열 이데올로기와 날카롭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임금 인상은 자본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계급 내부 격차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신에 따라 꾸준히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투지와 조직 상태에 따라 비슷한 조건 하에서도 임금 수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산업 간, 기업 간에 규모와 생산성 등의 불균등 때문에 노동조건과 임금의 격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더 나은 조건의 노동자들을 끌어내릴 생각이 아니라면, 진정한 쟁점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평준화가 상향으로 이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다.

더 따낼 힘과 조건이 있는 노동자들이 굳이 자신의 요구를 억제하는 것이 노동계급 전체에 이로운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 결국 **상황 평준화에 부합할 때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임금을 평균 수준으로 통일시키려 한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제도는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 상승보다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대기업 사용자들만 이득 본 제도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연대임금제는 대기업 기층 노동자들의 반발로 무너졌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간부는 “임금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중소기업에 오려는 인력도 적고, 어렵게 뽑아놔도 금방 대기업으로 가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필요 인력을 붙잡으려면 임금을 올려 줘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바 중 하나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상

대적 고임금이 노동계급 전체의 동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 평준화

물론 기업별 격차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남는다. 여기서도 원인과 책임은 자본가들의 정책에 있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노동자도 ‘하청과 비정규직들 임금이 내렸으니 이제 내 임금이 올라갈 거야!’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지킬 확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야 나 대신 누군가 희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물론 노동계급 내부의 차별에 대한 조직 노동자운동의 대처에도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별히 노조 상층 지도자들의 책임이크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는 진정한 노동자 단결을 위해 노조 관료의 개혁주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주의적 정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조직 노동운동이 국가복지 확대에 앞장서는 것도 필요하다. 노후 연금, 실업수당뿐 아니라 교육비, 주거비 등에도 국

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런 복지는 간접적인 임금 인상이라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이 효과를 확실하게 내려면 보편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상대적 고임금이 우월한 조직력과 투쟁력 덕분이라면, 그 수령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아니라 그들이 승리하도록 연대하면서 그 강력한 힘을 노동계급 내부 연대와 그 밖의 피억압 대중을 보호하는 일에 쓰도록 고무하는 것이 옳고 현명하다.

노동계급을 단결시켜 자본가들의 권력과 효과적으로 대결하게 할 진정한(사회주의적)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올해 민주노총은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반대하고, 생활임금이라는 관점에서 표준생계비를 계산해 이에 기초한 임금인상 요구를 내놓았다. 복지 삭감에도 반대하고 있다.

격차 해소를 빌미로 상대적 고임금 작업장의 임금인상 투쟁을 경시하는 노동운동 일각의 주장은 이런 요구들을 제대로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자에게 임금 인상이 중요한 이유

첫째,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력 말고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사실상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들이 누릴 것도 많아진다.

둘째, 노동력은 노동자의 신체에서 분리할 수 없으므로 노동력 생산비는 결국 노동자 생산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 임금은 생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최저임금), ‘생활임금’이 돼야 한다.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유지하며 생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기준은 그 사회의 경제와 문화 수준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적정 임금 수준이란 경제 법칙의 영향도 받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임금노동자와 자본의 힘겨루기를 반영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는 필수적이고 정당한 것이 된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액수가 고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충분한 임금에 기초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갖는 것은 세상을 변화하는 데 앞장설 정치적·문화적 소양을 노동계급이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임금은 고용이 돼야만 획득이 가능하다. 고용과 임금을 지키려면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한다. 자본가의 이간질과 노동계 지도자들의 개혁주의를 뛰어 넘을 진정으로 변혁적인 정치가 중요한 이유다.